

사람중심 지속가능 행복도시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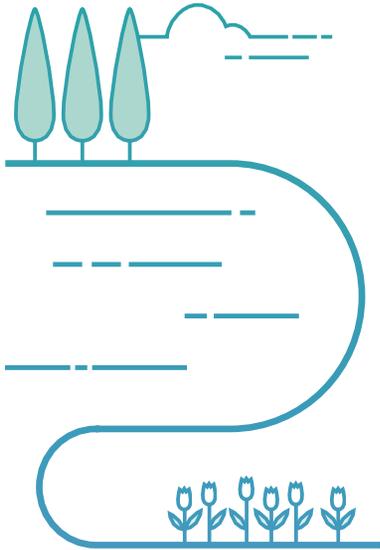
—
고양시 우수정책 10선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TYANG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서론	사람중심 지속가능 행복도시 고양
	4



1	고양의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다
	14

2	고양의 시민, 시정에 참여하다
	26

3	고양의 미래, 신 산업 육성으로 자족도시를 꿈꾼다
	38

4	고양의 혁신, 남북협력을 평화경제로 전환하다
	50

5	고양의 청년, 희망을 찾다
	58



6

모두를 위한
글로벌학습도시
고양

66

7

시민안심도시 고양,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76

8

고양의 복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다

86



10

고양의 교통,
더
편리해지다

110

9

고양의 환경,
지속가능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다

96

결론

지속가능
도시
고양

118

서론

사람중심 지속가능 행복도시 고양

- 성장주의 도시 패러다임의 문제점
- 사람중심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고양시
- 고양시정의 핵심가치와 주요 정책 10선
- 고양특례시의 과제와 나아갈 길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성장주의 도시 패러다임의 문제점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습하면서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단기간에 세계대전보다도 더 큰 인명피해를 입었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인간의 삶의 양식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양극화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가능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지구 차원의 환경파괴는 앞으로도 더 위험한 신종 감염병을 예고하고 있다. 즉 양적 성장지상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를 초래하며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위기는 미래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에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물질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고 있고, 심화되는 양극화는 부자와 빈자 모두를 소외시키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마천루가 가득한 도시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도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만들어가는 집약된 공간이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에 포획되어 사람이 소외된다면, 그 도시는 이미 유지가능성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도시’는 ‘사람이 협동하며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정에서도 물질 성장이 우선하며 사람이 소외되기 일췌였다. 199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HABITAT) II’에서는 주거권과 환경지속성을 존중하며 도시를 진정 인간에게 환원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결의했다. 사람중심 사회를 중시하는 도시정책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고양시는 도시기능이 잘 조화된 도시가 아니라 ‘침대도시’로 속칭되었듯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만 확대되며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주민들의 일터는 서울이었고, 그러다 보니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도 서울로 오가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택지개발 중심의 도시 확장을 추구해온 고양시도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도시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주거단지로 개발되며 소비중심 도시가 되다 보니 도시의 자족기능은 현저히 낮다.

산업구조는 대형 쇼핑몰을 비롯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업규모도 대형 쇼핑몰과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99%가 50인 미만 소기업이다.

자족도시를 위해 고양테크노밸리와 CJ-Live City, 장항 방송영상밸리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주체가 경기도이다 보니 시간이 더디다. 여기에 2020년 부동산투기 열풍에 대한 주택정책 일환으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자족기능이 보완된 제2판교를 꿈꾸지만, 아직 구체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개발주의가 관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재준 시장이 이끄는 민선7기 고양시는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미완성의 주거도시에서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진화해가는 고양시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라는 명칭을 갖고 새 출발한다.

사람중심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고양시

민선5기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정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양시도 민선7기에 사람중심 도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복원 20년이 되던 2010년부터 자치단체들이 ‘사람’을 중심축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불균형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사회가 민주적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 접어들었음에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4대강 개발, 도시 재개발 등 개발주의가 재등장하자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선5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환경파괴 등 양적 성장의 왜곡현상에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른바 3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다수 진출했다. 이들이 단체장으로 취임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사람’을 정책의 중심개념으로 채택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면 ‘사람중심 도시’란 어떤 의미인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 발전이 제창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추동되었고,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서도 사람중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진보도시(Progressive City)’론을 주창해온 더글라스(M. Douglas) 교수는 진보도시 모형을 논하면서 도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포용성’, ‘분배정의’, ‘상열(相悅 Conviviality, 즐거움을 서로 나눔)’,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속에 공통되는 요소도 ‘사람’이다.

한편 20년 만에 2016년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개최된 UN 해비타트 III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로 포용적인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참여적인 도시, 고밀도 도시를 제안했다. 유엔 해비타트 III의 도시의제는, 지구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인구의 55%가 살면서 GDP의 70%,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폐기물의 70%를 배출하면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제시한 도시의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도시(Inclusive City)는 현재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 재화,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는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의한 위험을 견뎌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재난에 따른 영향과 시민들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전한 도시(Safe City)는 공공 공간이 다채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낙인이 없어 시민들 사이에 장벽이 없는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 도시(Sustainable City)는 경제적 번영과 자연 자원에 대한 존중을 모두 고려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를 말한다.

참여적 도시(Participatory City)는 포용성과 소속감을 일으키고,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고밀도 도시(Compact City)는 도시 한계 영역 내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대중교통을 촉진하여 토지의 복합적 공공적 사용을 촉진하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시민들에게 도시권(Right to the City)이 있다고 선언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 17개 항목 중에서 도시는 11번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 출발하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이전부터의 구도심은 물론이고, 30년이 경과한 일산신도시도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자족도시를 향한 개발요구가 상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질과 쾌적성 등 사람중심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요구도 커지고 있다.

도시는 사람이 모여서 성장하고, 사람이 흩어지며 쇠퇴한다. 그러므로 도시는 언제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중심 도시이어야 한다. 도시를 구성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력 보완하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책은 주권자인 시민을 주체로 시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협치(Governance)를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하려는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한다. 고양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Live City 등 일산지역 개발사업과 창릉신도시 건설 등 여전히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탈탄소 지속가능 도시로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의 민선7기에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4대 핵심비전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를 위해서는 한반도-동북아 허브 도시, 남북경제 중심 도시, 대한민국 평화 도시를 추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위해서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 도시를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 도시’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행

정복지 도시,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 도시를 추진하며,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 도시’를 위하여 빠르고 깨끗한 쾌적 도시,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 도시 등 10대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85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과제들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앞에서 기술한 진보도시의 핵심가치와 해비타트 III의 도시 의제를 종합하여 100만 대도시 고양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또는 의제를 설정하고, 고양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비교적 핵심가치에 잘 부합하는 정책을 골라 추진과정과 성과, 한계 등을 기술하려 한다.

고양시정의 핵심가치와 주요 정책 10선

2022년 100만 특례시로 출범하게 될 고양시가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도시 고양특례시’로 발전해가려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포용성, 사회적 정의, 시민행복, 그리고 지속가능성 네 가지가 중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핵심가치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의 가치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개관한다. 각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1. 포용성: 시민자치로 도시권 구현

도시정책의 첫 번째 핵심가치는 포용성(Inclusiveness)이다. 포용성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차

별 없이 공적 삶(Public Life)에 참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시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어떠한 차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재(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포용도시이다. 시정(市政)이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민-관이 더불어 협동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수행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인간성을 발현하고 품격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사람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시민들을 포용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양시가 추진해온 정책들 중 ‘도시재생 및 마을 유희 공간 녹지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제안제도’와 같은 제도나 정책들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 및 마을유희공간 녹지조성

그동안 오래된 도시의 정비사업은 주로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주로 대형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이 중심이었다.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이러한 기존 도시 재개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도시를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주민 스스로 도시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원당, 능곡, 일산 지역 뉴타운사업구역과 삼송, 화전, 행주 재개발제한해제구역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이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2017년 화전·원당, 2018년 일산·삼송, 2019년 능곡·성사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체장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조직·인력·예산의 적극적 지원조치가 뒷받침이 되었고, 주민의 적

극적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마을 유희 공간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 속 주거지역에 있는 유희공간에 쌈지공원 등 쾌적한 녹색공간과 마을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유희 공간 활용 방법으로는 쌈지공원, 가로숲(가로수 2열 식재), 도심숲 조성이며,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총 28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제도(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제안제)

고양시는 다양한 주민참여기제가 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적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고양시의 재정자원이 각 부문 각 지역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양시는 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웹툰형 홍보물 ‘고양고양이’로 주민인식을 개선하고, 우수제안 인센티브, ‘제안방’ 플랫폼, 온라인예산학교, ‘시민참여예산 집콕 한마당’, 대상별 토론회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적극 대응하고 있고, 모범적 사례로 효능감을 인정받고 있다.

시정에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제한할 수 있는 시민(공무원)제안제도는 발굴-보완-숙성-평가-포상-관리절차의 체계로 운영되며,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창안대회,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제안창작소 등이 있으며, 시민 공무원 모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은 ‘제안꾸러미’라는 명칭으로 행정시스템에 탑재해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사회정의: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사람중심 도시정책의 두 번째 핵심가치는 사회적 정의(So-

cial Justice)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을 우선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희생되고, 도시에서는 양극화가 부유한 지역과 슬럼화된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배적 불공정을 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공공서비스가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공동체를 지향한다. 성장논리에 매몰된 정책결정구조를 지양하고, 정책자원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시민 모두의 인권과 품격 있는 삶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즉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등 경제적 기반을 보장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인권에 주목하여 남북협력을 평화경제로 접근하며 방송영상콘텐츠 및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해왔으며, 우선 가능한 사업으로 ‘평화경제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남북의료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경제구조의 첨단화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받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 정책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로 자족도시로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훼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신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다각적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족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받고, 2020년에는 스마트원예기반 조

성사업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를 추진했다. 유통이 생명인 화훼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원당지역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Live City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영상·콘텐츠 등 지식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미래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드론밸리 조성 사업에도 선정되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창릉 3기 신도시는 판교신도와 같이 자족기능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어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더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희망 정책 벨트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은 ‘고용 충격 → 출산 충격’으로 이어지며 저출생 고령화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세대갈등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고양시도 저출생이 심화되는 속에서 청년들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의 생애주기 취·창업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어려움과 희망사항을 청취하는 ‘우리동네 청취다방’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청년희망 정책벨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창업에 의지가 있는 시민,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 클러스터와 창의적인 창업 환경, 그리고 창업지원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왔다. 즉 취·창업 및 소통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희망시대’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청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년과 노년,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그 중에는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되기도 했고, 전국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였다.

평화경제특별시 : 남북평화의료바이오센터

고양시는 휴전선에 연접한 접경도시는 아니지만 파주·김포·연천 등의 배후대도시로서 민선7기에 들어와 '평화경제특별시'를 선포하고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며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가며 실질적 협력이 어려워지자 평화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평화경제특구 등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관내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협력하여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하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행태 및 질병언어 비교연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고양 평화의료포럼을 개최하여 신종 감염병 시대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모형을 연구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마중물사업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에 평화의료교육센터 등 '평화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 시민행복 : 문화와 품격이 있는 사회 구현

고양시가 세 번째로 주목하는 핵심가치는 시민행복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경제성장을 평가하지만, 이들 지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GNP/GDP는 생산되는 상품(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뿐 여가나 쾌적한 환경, 가사노동, 민주적 정치참여 등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의 조건들은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품격 있는 삶을 꾸려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 쾌적함이 넘치는 숲과 공원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삶의 여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난 재해가 빈발하는 대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시민행복의 기초조건이다.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자연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자율적 삶을 충분히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자율적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도시를 확충하면서, 품격 있는 삶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평생교육도시

고양시는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응집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발전, 문화번영,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배움의 접근성, 다양성, 지속성을 기조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평생학습 진흥모형을 구축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학습도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에 가입하고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 도시 지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고양시는 타 지역과 달리 평생학습전달체계의 강화를 중시한다. 권역 특화학습 공간 6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풀뿌리 마을학습장을 위한 평생학습카페 45개소도 운영 중

이다. 학습공간 확보와 학습참여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자발적 학습모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시민안심도시

코로나19는 세계를 팬데믹 위기에 빠뜨렸고, 국내에서도 '비대면의 일상화'라는 낯선 일상이 경제,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양시는 2020년 1월 22일 국내 3번 확진자 사례가 관내에서 보고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일 관내 대형 병원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안심카(Drive-Through)선별진료 방식이 제안되자 당일 오후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표준 모형이 되었다.

이후 안심넷, 안심콜 등 일련의 시민 '안심' 정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방역과 시민사회의 안심, 안전을 도모하는 등 신종 감염병 시대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20년 대표적인 공공행정혁신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음건강도시

고양시는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 도시를 표방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와 생활안전이 중요하다.

고양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외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70세 이상 치매 무료 검진 등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이 수혜대상자인 자전거안심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또한 시민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마스터 제도도 도입, 운영하고 있다.

4. 지속가능성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순환사회

고양시가 추구하는 네 번째 핵심가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번영과 자연환경 및 자원을 균형 있게 존중하는 정책혁신을 통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모든 계층이 고루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 자체가 생태적·환경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 그 도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시민주권이 발휘되는 시민자치도 도시의 생태적, 환경적 순환이 유지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고양시는 북한산과 한강을 경계로 하는 우수한 생태 환경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려는 다양한 친환경보전정책과 함께 도시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파리기후협약 준수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환경도시'를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문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통문제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려 노력하는 '교통전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 환경도시

고양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주목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 '미세먼지 대책과 주민 친화적 환경 처리시설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20% 목표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보급하고 있다.

조수간만으로 형성된 장항습지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0여 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보고이며, 탄소저장고로서의 가치도 높아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동시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다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그린 모빌리티 보급, 경유차 감축 및 전기버스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회수 및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친화적으로 환경처리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교통전환도시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서울의 배후도시로 확장을 거듭한 고양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대중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자가용 이용이 많아 친환경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했다. 민선7기에는 다양한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노선확대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춘 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였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기버스 및 트램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해 공유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을 장려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 과제와 나아갈 길

고양시는 그동안 인권과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

를 구축하고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이재준 시장의 민선7기에서는 ‘사람’의 가치에 주목하고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4대 핵심 비전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앞에서 선정한 10가지 정책은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도시, 고양시’를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도시’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미래과제이다. 무릇 모든 도시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또한 사람과 모든 자연생태종의 것이다. 생태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도시는 지속불가능한 도시이며, 그 미래는 없다.

고양시는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쾌적한 대도시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선언했듯이 21세기 대도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여야 하고 ‘도시권’이 발현되어야 한다. 고양시도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핵심가치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관 협치 체계를 바탕으로 시정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고양시는 높은 시민력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고양시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어떤 도시보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양시는 말 그대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도시’가 될 수 있다.

고양시는 킨텍스라는 세계 유수의 대규모 전시장을 갖고 있으며, 고속철도 KTX 출발역이 관내에 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인접한 100만 대도시이다.

이처럼 세계를 향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다. 세계는 점점 범지구화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주의도 태동하고 있지만 세계적 생산-가치사슬은 확대될 것이며, 세계화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역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모든 지역은 각각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산업화에서는 세계표준에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지만, 도

시정책에서는 세계표준이 없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세계표준으로 인식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표준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나 마을이 갖고 있는 개성', 즉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K-POP 한류처럼 '세계로 통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시는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역사성을 지닌 개성 있는 문화를 지닌 도시이다. 물적 시설로서 서울과 서삼 등 세계문화유산, 행주산성과 벽제관터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맹자(孟子)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를 이기지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업 추진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나 자연,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개성을 철저히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다. 고양시민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람중심 도시 고양시의 방식이어야 한다. 고양다운 지역의 독자적 해결책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가 고양특례시여야 한다.

지금 고양은 도시정책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아니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각각의 지역도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의 안전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교육, 산업, 도시시설, 의료 및 복지, 지역사회 등등 종래의 방식으로는 유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과 방식을 찾아내고 추진하는 속에서 고양에 적합한, 또는 각각의 마을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성을 가진 도시나 마을만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고양에는 풍부한 지리(地利)가 있다. 고양은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이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고, 행

신역은 경부·호남선 KTX의 출발점이다.

현재 GTX-A노선이 건설 중이고, 앞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결되고, 신분당선 연결도 계획되어 있다. 역사성을 간직한 행주산성과 벽제관터, 서울과 서삼 등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장항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기도 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 평화협력시대가 열리면 킨텍스를 포함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양에는 지금 천시(天時)도 찾아오고 있다. 고양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Live City, 창릉신도시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줄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치된다면 금상첨화이다. 단순한 자족기능의 강화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방송영상콘텐츠나 암이나 신종 감염병 치료와 같은 첨단의료산업이 발흥하고 있다.

고양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화(人和)가 있다. 시민들의 지적 수준인 높고, 시민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천시, 지리를 잘 살피면 고양의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도시'이다. 고양의 오늘은 내일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구도심의 재생이나 일산신도시의 재생, 그리고 장항지구나 창릉지구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은 한편으로 자연경관의 파괴라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동한다.

이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과제이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품격 있는 시민과 열린 거버넌스 체계를 존중하는 단체장·시의원·공직자가 소통하고 협력하면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시민행복도시'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이다.



고양의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다

고양시는 일산 제1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창릉 제3기 신도시 지정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다양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갈수록 노후되고 있는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원도심의 노후화는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중 고양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가지 정책의 주요 내용,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정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마을유휴공간 녹지조성 사업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래 목표 보다 많은 수의 녹지조성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광진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kj815@gyri.re.kr)

개요 및 목표

1.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의 역량 강화(S/W)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여 도시를 '종합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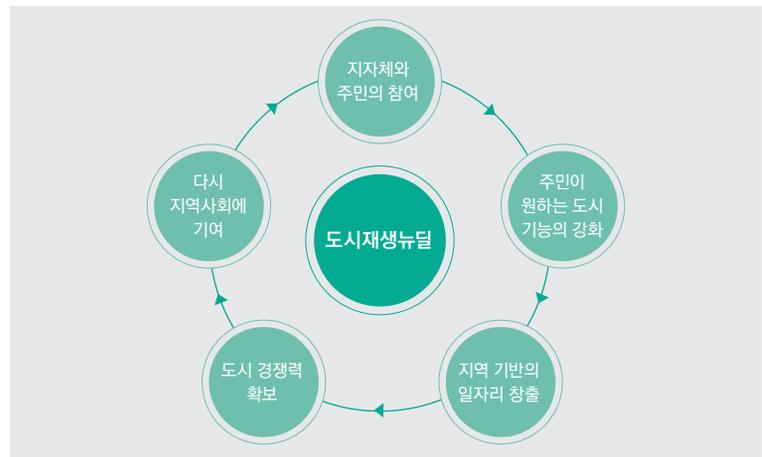
2.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 유희공간 활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과제이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심 속 주거지역 마을 유희공간에 쌈지공원 등 도심지 내 시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녹색공간과 마을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유희공간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쌈지공원, 가로숲, 도심숲 조성을 채택하였고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총 28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

가로숲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 추진 시 가로수 식재(2열) 강력 추진
도심숲
관내 보행자도로, 초·중·고교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녹지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및 여가활동공간 조성
쌈지공원
마을 유희공간에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및 여가활동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사업과정과 내용

1. 도시재생사업

그동안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택들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구시가지가 철거되고 주로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기존 정비사업은 공익성 결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를 수반하였으며, 이에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참여,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측면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술의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도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5년간 50조 원 투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아래 고양시는 원당, 능곡, 일산 지역 뉴타운사업구역과 삼송, 화전, 행주 개발제한해제구역 등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2017년 화전과 원당, 2018년 일산과 삼송, 2019년 능곡과 성사지역이 선정되어 모두 6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의 변천

	과거 도시정비	도시재생
주제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 • 개발 이익에 관심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 개발 이익에 관심
대상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 역세권, 한강 조망 등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 단독·다세대 중심 저층 주거지
방식	일률적인 물리적 환경정비 • 아파트, 주변 도로포장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2017 선정	
화전(2)지역	원당(2)지역
사업명 : 상생활주로 '활, 활, 활' 프로젝트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면적 : 14만 4,399m ²	사업명 : 함께 만드는 살터 놀터 '당당한 원당 사람들'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면적 : 5만m ²
2018 선정	
일산(2)지역	삼송(2)지역
사업명 :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면적 : 17만 7,000m ²	사업명 : 삶이 즐겁고, 정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사업유형 : 주거지원형 면적 : 13만 5,000m ²
2018 선정	
능곡지역	성사지역
사업명 :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면적 : 13만 1,362m ²	사업명 : 성사 혁신지구 사업유형 : 도시재생 혁신지구 면적 : 1만 2,355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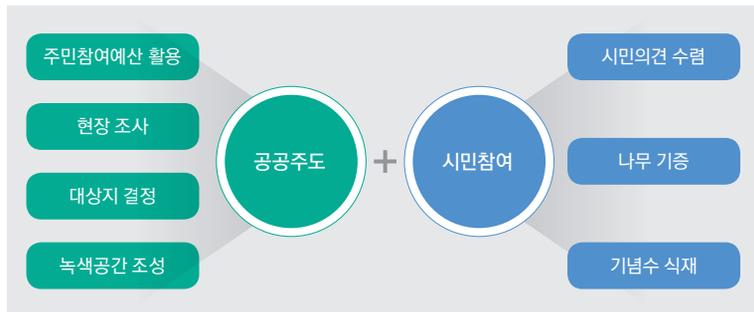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조직·인력·예산의 지원이 있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첫해인 2017년은 뉴타운 사업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하

여 2017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급부상하자 아직 전담조직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도 당해 연도 뉴딜사업에 화전과 원당 2곳을 선정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에서 선정된 뉴딜사업이 3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이후 인력과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단일 조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2020년에 도시관리공사에 편입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고양시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현장지원센터 역시 비상근직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2.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대상 후보지의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대상지를 결정하였다. 공원, 녹지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녹색공간 확대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 ‘도시열섬화 저감공간’, ‘빗물정원’ 등 기능숲 조성,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비 약 14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위해 9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양 희망나무심기 사업을 병행하여 각종 개발로 인해 베어져야 하거나 버려진 나무들을 기증 받아 도심 속에 숲과 녹지를 조성하였다.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각종 축하행사에 나무를 식재하고 싶지만 장소가 없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식재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및 시민이 참여하는 가로숲 조성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의 구조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 시민 의견 수렴

성과와 평가

1. 도시재생사업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특성상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집행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양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능곡지역 뉴딜사업지역 주민들이 옛 능곡역사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여하여 축제화하는 모습들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높아지는 기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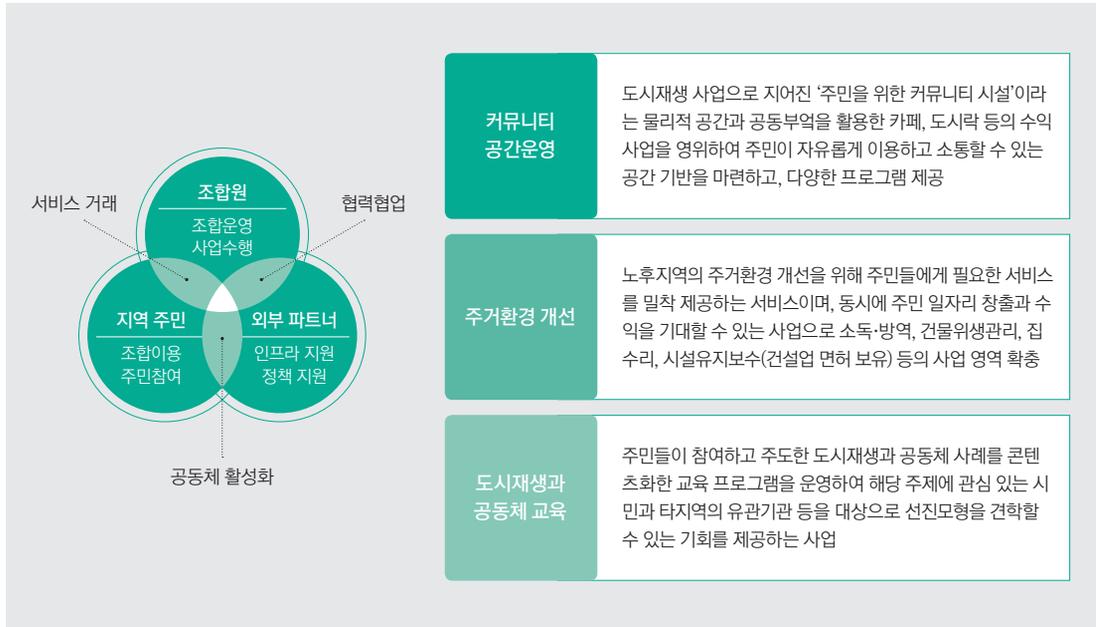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2020년 사업이 종료된 원당지역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지역 주민들이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자생조직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기초생활 인프라, 앵커시설 유지·관리와 지역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마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배다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살이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생활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등 주민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 커뮤니티공간 운영,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과 공동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당문화플랫폼 준공식

배다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범위



도시재생사업 시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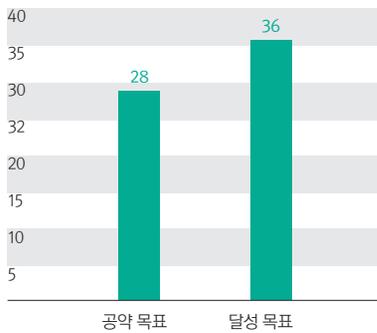


배다리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2. 마을 유휴공간
녹지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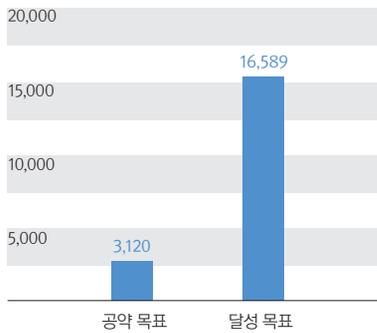
마을 유휴공간 활용의 당초 목표는 민선7기 기간 내 쌈지공원 등 28개소 조성이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0년 하반기까지 36개소를 조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공약목표액은 31억 2,000만 원이었으나 약 500% 이상인 165억 8,9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고양시민 1인당 도심숲 면적이 2018년 8.4m²에서 2020년 9.6m²으로 증가하였다.

개소 수



구분	개소 수
공약 목표	28
달성 목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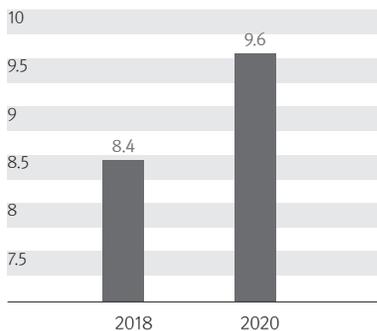
예산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액
공약 목표	3,120
달성 목표	16,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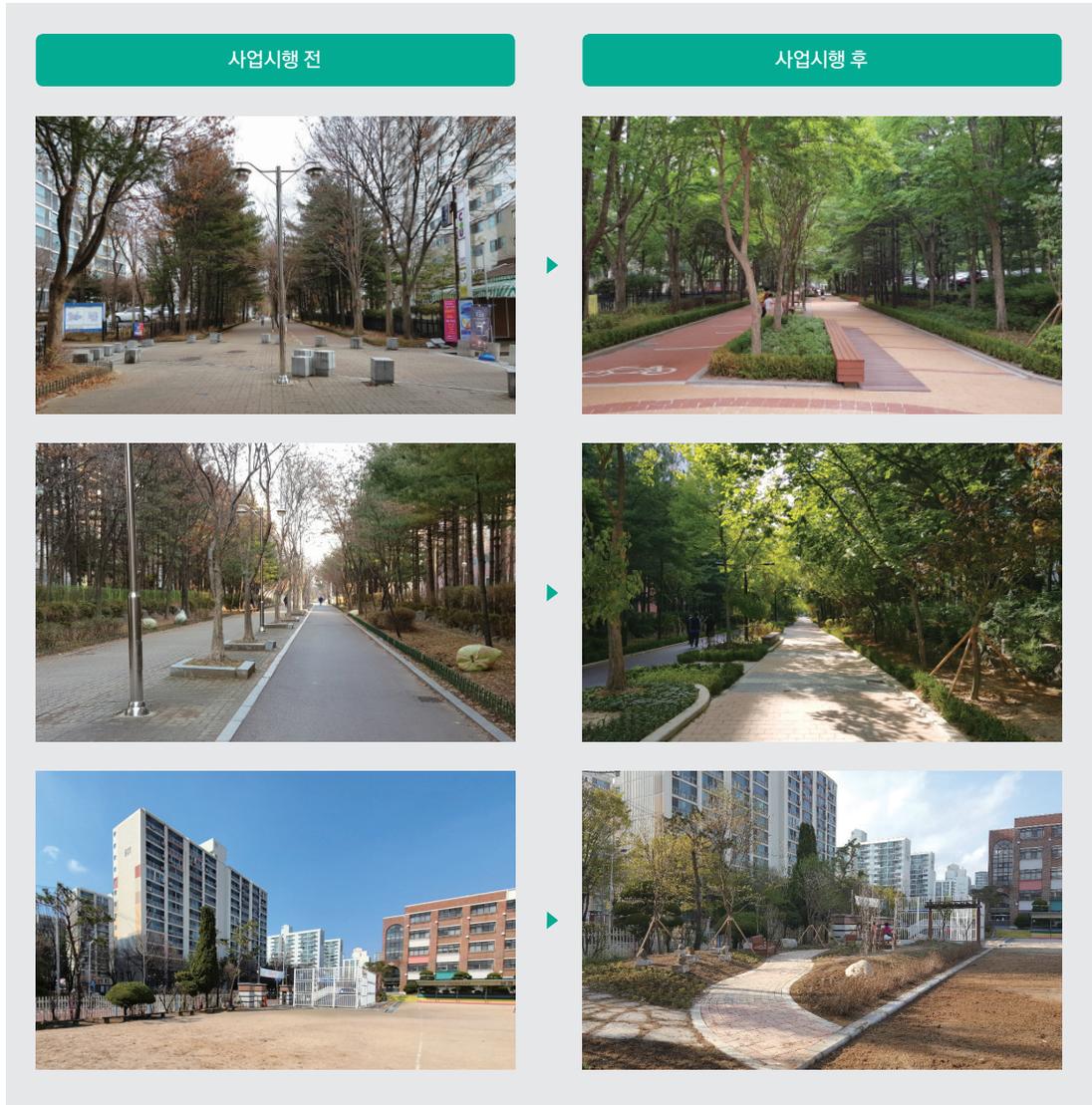
인당 면적



(단위 : m²)

구분	인당 면적
2018	8.4
2020	9.6

마을 유희공간 녹지조성 사업의 성과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식재 조성을 통해 여름철 시원한 녹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삼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생활권과 가까운 공간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개선방향

1.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교통·건설·주민자치·일자리·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 추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4~5년의 짧은 사업기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에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으며, 사업의 질적인 평가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계속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협의체의 조직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6개의 사업 중 최근에 선정된 능곡과 성사는 사업을 준비 중이며 기 선정된 4개의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다. 원당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화전은 2021년, 일산과 삼송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원당의 경우 협동조합을 기 구성하였으며 화전은 설립인가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일산과 삼송의 경우에도 원당과 화전의 경우를 참조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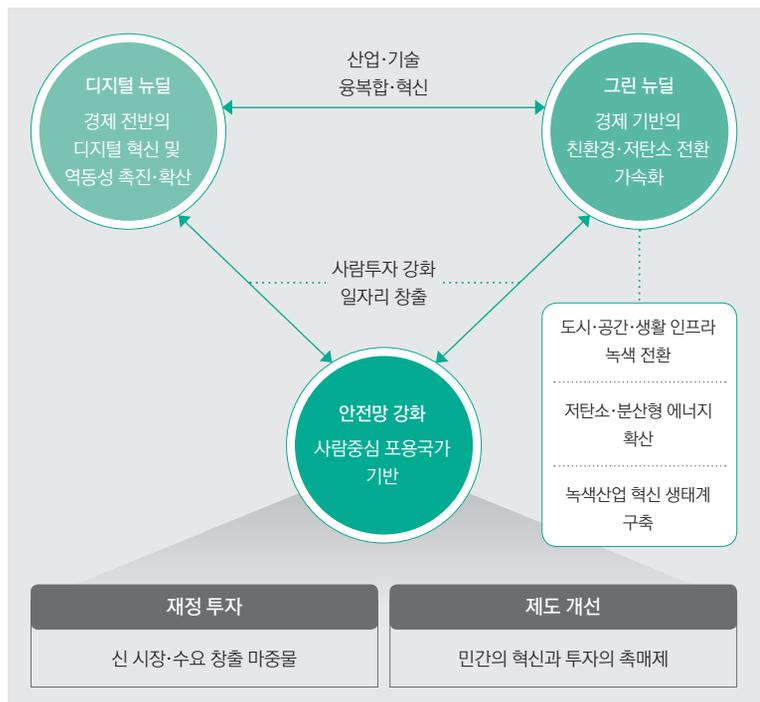
단위사업	2018	2019	2020	2021	2022.06
원당	활성화계획 승인 및 주민공동체 사업 등 추진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 추진	사업마무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	-	-
화전	활성화계획 승인 및 주민공동체 사업 등 추진	드론센터 건립사업 등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추진	사업마무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	-
일산	-	활성화계획 승인 및 주민공동체 사업 등 추진	경관개선 청년특화거리 및 보행자우선거리 조성 등 추진	노후청사복합개발 (공동이용시설건립 등 추진)	사업마무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
삼송	-	활성화계획 승인 및 주민공동체 사업 등 추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의주길 정비사업 등 추진	사업마무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

2. 마을 유희공간 녹지 조성 사업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가지를 주창하였고, 이에 따른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지속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당초 목적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녹색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추가 확보하여 조성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방향



2

고양의 시민, 시정에 참여하다

촛불로 시작된 현 정부는 '국민의 시대'를 표방하고,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하여 국민주도(이하 시민주도)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주도 시대를 위해서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관건이다. 시민주도의 행정은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실행 및 평가에까지 시민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책 참여 심화 정도에 따라서 정보제공(정부⇒시민)→정보제공(시민⇒정부)→협의→능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그 방법들을 분류한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정책의제 설정단계의 협의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참여 예산조례 재정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주민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는 지방개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는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성과 등 예산의 전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정(市政)의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의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은 당면 문제의 해결 또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까지 참여한다. 고양시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국민 제안 규정의 전면 재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과 국민의 제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였다.

김형성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hskim@gyri.re.kr)

개요 및 목표

고양시는 민선 7기의 시정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두번째 정책 목표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 도시의 건설’로 제시하고 정책목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소통과 공감의 혁신도시’에 두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혁신 자치행정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

시민주도 행정은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은 시민참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유형

구분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부 ⇒ 주민	-	· 주민설명회 · 주민참관 · 확대간부회의 · 결재문서 공개방	· 행정정보 공개 · 인터넷 법률상담실 · 시정 운영상황 공개 · 메일링 문자서비스	· 평가결과 공개 · 감사결과 공개
정보 제공	· 인터넷 민원실 ⇒ ex) 기관장에게 바란다	· 정책토론폰방 · 사이버 토론광장	· 부조리 신고제 · 인터넷 시정참여 · 신문고제 · 모니터제 · 직소 민원창구 · 이동민원실	· 행정 서비스시민 만족도조사 · 민원행정개선 설문조사 · 전화친절도 평가
협의	· 주민참여 예산제도 · 정책설문 조사 · 사이버 정책토론폰방 · 여론조사	· 정책자문단(위원회) · 온라인 정책토론 · 각종위원회 · 설명회	· 모니터제 · 1일 명예공무원제 · 정책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정책 모니터링제도 · 사이버 모니터
능동적 참여	· 주민감사 청구제 · 주민 제안제도 · 인터넷 주민참여 · 명예기자제 · 주민 아이디어 모집	· 공청회 · 인터넷 공청회 · 심의위원회 · 주민투표제	· 민간자원 봉사자 (민간환경 감시단) · 명예 감시원제 (명예직) (명예감독관제, 명예단속반)	· 정책평가단(위원회) · 시민 감사관제 ·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제 · ombudsman · 시민 고충처리관제

시민참여 유형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 기제로는 정부⇒주민으로의 정보제공 방법으로 시정운영상황을 ‘SNS 통합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협의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정책자문단 등 위원회,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능동적 참여방법으로 주민제안제도 또는 주민 아이디어 모집 방안인 ‘한 줄의 아이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 기제 중 ‘SNS 통합앱’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민주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민참여위원회’는 2020년에 구축된 제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 기제 중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제시한 ‘한 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숙성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참여 기제의 운영 목표는 시민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사업과정과 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 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하여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 한정되었던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정,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예산편성 과정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2018년 개정에 맞추어 실질적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과적 자원 배분 실현을 위해 예산 전 과정(예산, 집행, 결산 등)에 시민참여와 시민주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중요성과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미흡, 번거로운 절차 등이었으며, 참여한다고 해도 자기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우선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과 참여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먼저 ‘고양고양이’ 웹툰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하철역사,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였다. ②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수사업 제안자인 센터브를 도입하였다.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하여 최대 30만 원 고양페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③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였다. ④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대면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예산학교’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때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대, 관심고조와 더불어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는 인식확대를 위하여 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청년 SNS서포터즈 활용 비

시민참여예산 '집콕' 한마당 제안사업 시민투표 결과

구분	사업명	득표수	수상인원	시상내역
대상	횡단보도 장수익자 설치	166표	2명(공동제안)	각 30만 원
최우수상	은행나무 그늘막 설치 확대	103표	1명	20만 원
우수상	스마트 시정홍보게시판 도입	78표	1명	1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1표	7명	각 5만 원
	코로나19 극복 자전거길 확충	57표	-	-
	고양누리길 표지판 설치	51표	-	-
장려상	차량 공회전 노인 일자리 제공	37표	-	-
	고양화훼단지 자전거도로 개설	35표	-	-
	킨텍스 유희부지 꽃밭 조성	30표	-	-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 후 통행	23표	-	-
총계		651표	11명	125만 원

대상별 릴레이 토론회

구분	1차 : 청소년	2차 : 청년·상인·장애인	3차 : 여성·다문화
일시	10.10(토) 14:00~16:00	10.22(목) 15:00~16:30	10.22(목) 16:30~18:00
장소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 평화누리실	
참석자	청소년 17명	청년·상인·장애인 등 20명	여성·다문화 17명

대면 홍보를 도입, 운영하였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도 반영사업 대상 분과별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하였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참여를 위하여 온택트(Ontact) 시민주도형 행사인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집콕 한마당'을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였다.

넷째, 시민참여 방법의 다각화를 통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고양시 청소년 재단과 시민제안제도와와의 연계사업으로 여성·장애인·청년·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자유로운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사항을 참여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시민(공무원)제안제도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국민 제안 규정의 전면 재개정에 따라 고양시도 2019년 3월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으로 개정하여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양시 시민제안제도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시민제안제도 주요추진방향



주요 추진 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제도 참여 다양화</p> <hr/> <p style="text-align: center;">발굴</p> <hr/> <p style="text-align: center;">① 한 줄 아이디어 ② 고양시민창안 대회 ③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④ (청소년) 제안창작소 ⑤ (직원) 제안발굴단</p>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 내실화 방안</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보완·숙성</p> <hr/> <p style="text-align: center;">① 시정제안방 ② 국민생각함 ③ 제안오디션</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한 평가</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실무심사위원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인센티브</p> <hr/> <p style="text-align: center;">① 우수 (채택) 제안자 ② 제안제도 참여 (직원) 인센티브 ③ 제안제도 운영 우수부서 평가 ④ 적극행정 공무원 가점 부여</p>	<p style="text-align: center;">체계적 제안관리</p> <hr/>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p> <hr/>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꾸러미</p>

시민(공무원)제안제도는 발굴→(보완·숙성)→평가→포상→관리 절차로 운영되며,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제안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들은 어떠한 제안 주제이든, 어떠한 양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한줄로도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안 방법이 다양하다. 고양시민창안대회,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창작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한 줄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보완하고 숙성시키는 절차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한 줄 아이디어를 고양시 '국민생각함(온라인)'에 탑재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자유롭게 토론, 평가, 공감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숙성시킨다. 이때 채택되지 않은 우수제안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 절차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였다.

첫째, 공무원들도 어떠한 양식에 구애 없이 한줄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들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보완하고 숙성시키는 다양한 절차를 구축하였다. ① 제안발굴단을 운영하여 제안자와 실시자(4명)가 한 팀으로 제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제안의 보완과 숙성을 위하여 교육과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울 행정시스템 내에 '시정제안방'을 두고 직원들의 추천(50인 이상)을 받아 실무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불채택된 제안도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 오디션'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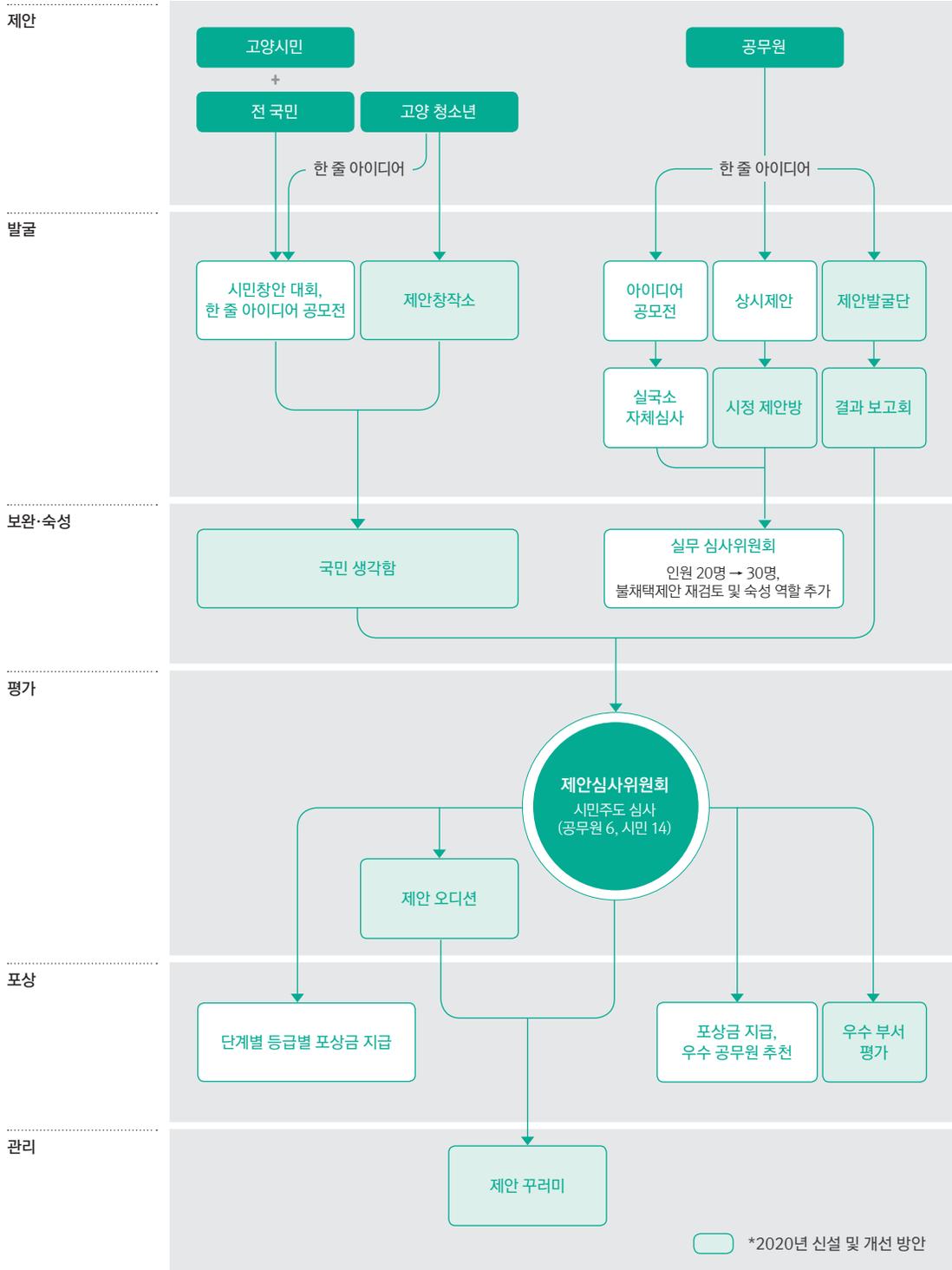
시민과 공무원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제안의 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안의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직원 개인에게는 '채택의 달인', '실시의 달인' 등의 칭호를 부여하여 제안자와 실시자를 동시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부서에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하여 지표 개선과 평가 반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이 버려지지 않고, 향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새울 행정시스템에 '제안 꾸러미'를 탑재하여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절차 중 새롭게 도입한 절차



성과와 평가

1. 주민참여예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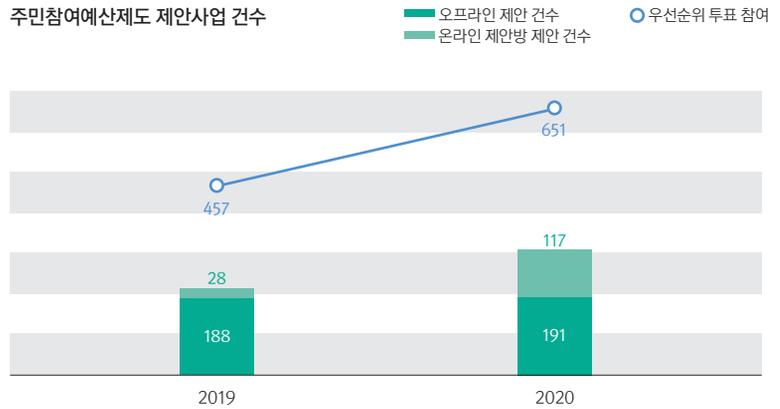
고양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하였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강의를 작성하고 이를 경기도 평생교육과 지식(GSEEK) 플랫폼 내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관련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관련 강좌의 조회수가 700회 이상 조회되었다. 또한 2020 경기도 종합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제안사업이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인 시 홈페이지 ‘제안방’ 시민제안사업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선순위 투표 대폭 증가하여 시민의 참여 효능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The screenshot shows the GSEEK online learning platform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course title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Understanding the Gyeonggi-do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its details. A table lists the course topics, their popularity (likes), and view counts. A sidebar on the righ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instructor, Son Jong-pil, and course statistics such as the number of lessons, difficulty level, and completion rate.

차시명	좋아요	조회수	학습하기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93	1,246회	학습하기
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	92	1,031회	학습하기
3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91	940회	학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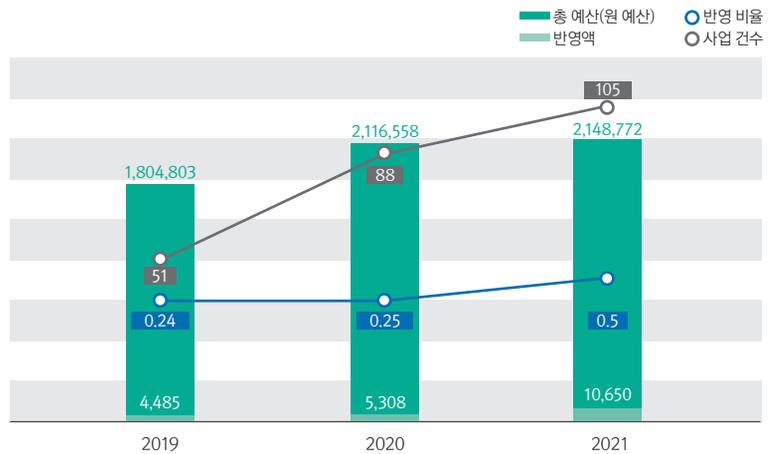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 건수



구분	2019	2020
오프라인 제안 건수	188	191
온라인 제안방 제안 건수	28	117
우선순위 투표 참여	457	65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건수 및 예산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총 예산(원 예산)	1,804,803	2,116,558	2,148,772
반영액	4,485	5,308	10,650
반영 비율	0.24	0.25	0.5
사업 건수	51	88	105

또한, 코로나19로 동지역회의 축소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약 106억 원이 참여예산으로 대폭 반영되었다.

2. 시민(공무원)제안제도

고양시의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주관 ‘2020년 제안활성화 시군평가’에서 경기도 표창(1그룹 1등, 전체 2등)과, 행안부 주관 ‘2020년 중앙우수제안’에서 대통령상 1건, 장관상 3건을 수상했다.

채택된 주요 제안으로는 ‘도로 빗물받이 위치표시(2020년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동상)’, ‘인감증명서 홀로그램 개선(제8회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제안)’,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2019년 제안발굴단 발굴제안)’, ‘고양시 재난문자 카카오톡 채널 연계’, ‘노약자를 위한 신호등 점등시간 연장’ 등이 있다.

제안제도 운영의 우수성은 ①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안하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한 줄 아이디어’ ② 제안의 정책화를 위한 제안 컨설팅 실시 등 ‘제안숙성’ ③ 시민,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제안 접수 플랫폼 운영(고양시청안대회 포함 각종 공모전, 제안창작소, 제안발굴단 등) 등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실시율이 2020년에는 38.4%까지 향상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건수 및 예산(2020.01.01~11.30) (단위: 건)

시민	국민신문고	고양시민청안 대회	청소년 제안창작소	시민 한 줄 아이디어	합계
접수 건수	118	8	14	74	214
채택 건수	38	0	2	7	47
실시 건수	17	0	0	3	20

공무원	국민신문고	자체접수	직원아이디어 공모전	기타 (제안발굴단, 한 줄 아이디어)	합계
접수 건수	4	15	58	20	97
채택 건수	0	5	15	6	26
실시 건수	0	3	0	5	8

‘한 줄 아이디어’ 채택율 및 실시율(2020.01.01~11.30)

구분	접수 건수	채택 건수	채택률	실시 건수	실시율
지표	311건	73건	23.5%	28건	38.4%

향후 개선방향

향후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들의 통합 또는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양시의 시정참여제도는 다양하다. 언론홍보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SNS통합 앱,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제도들이 개별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 간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 예로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되는 절차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들의 연계를 시도하고, 장기적으로 참여제도들의 유기적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제안 절차와 공무원 제안 절차의 차이를 보면 공무원은 제안된 사업의 실무자로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시민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설이나 사업에 제안한 시민도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제안에서부터 추진된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과 집행자로서의 기존의 공무원의 역할에서 정책조정과 사업지원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정역량과 지원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과 협업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시민들과의 협업이 증진되어 시민이 주도하는 고양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고양의 미래, 신 산업 육성으로 자족도시를 꿈꾼다

고양시는 주거 중심의 도시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자족도시 기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선정으로 고양시의 자족기능은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조업 육성이 불가한 고양시는 현재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제3킨텍스 건립을 확정 지어 미래 전시 산업의 중심으로서 전시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는 신산업으로 항공우주드론 R&D센터 설립 및 드론밸리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체감형 드론생태계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드론평가자유평가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향후 고양시 4차산업기술에 기반하는 신산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으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 유일한 산업단지인 화훼산업단지는 국내 유일 화훼산업특구로서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스마트원예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를 추진했다. 또한 유통 및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원당화훼단지 내에 화훼중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친화적 화훼 신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화훼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신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다각적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족기능이 강화된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선도적 미래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이현정

(도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hjlee@gyri.re.kr)

개요 및 목표

고양시는 2006년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이후 화훼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스마트원예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를 추진했다. 화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과 함께 제3킨텍스 건립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성과도 도출하였다. 신산업 중심의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는 드론밸리 조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뎠다.

고양시 유일의 산업단지인 화훼단지는 절화 및 분화 중심의 원당화훼단지외 선인장 및 다육식물 중심의 주교단지로 구성된다. 고양시는 전국 화훼생산량의 13%, 수출액의 15%, 비모란 선인장은 세계 교역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화훼 도매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산, 유통 및 판매에 걸친 가치사슬 전(全)과정의 시민접점 생태계 조성 및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한 화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의 건립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전시장(2005년), 제2전시장(2011년) 개장에 이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제3전시장은 디지털기술 기반의 전시산업 육성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구축하여 신마이스산업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비대면 환경에서의 디지털 기반의 전시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3전시장은 특별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전시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향후 전시산업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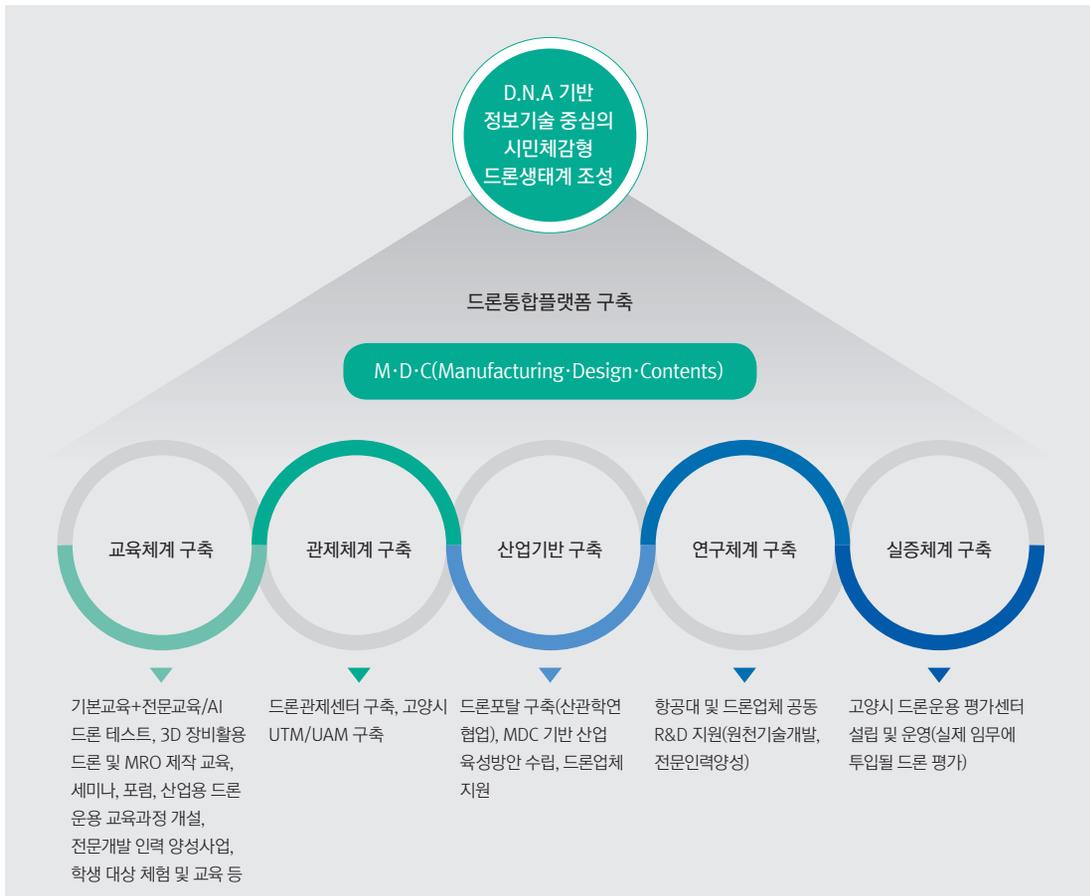
신산업육성을 위해 고양시는 2020년 항공우주드론 R&D센터의 설립과 드론밸리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해당 기반시설로 비행장 플랫폼, 관제 및 정비산업, 통신산업 및 교육산업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민

2020년 고양시 산업 육성 성과



체험형 드론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 기반 물류배송 거점, 드론 실감체험교육장, 문화 및 공연, 안전 예방, 인프라 점검, 영화 및 영상 산업 등의 비즈니스 기반 사업 모델들을 구상하고 있다. 드론과 연계하여 실증도시, 실감미디어기반 체험·교육 산업 및 스마트시티 구축 등도 이뤄질 것이다. 2020년 발표된 디지털뉴딜정책과도 연계한 D·N·A(Data·Network·AI) 기반 정보기술 중심의 시민체험형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양시 드론생태계 조성 추진체계 및 계획



사업과정과 내용

1. 화훼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2006년 화훼산업특구 지정 이후 조성된 화훼산업단지에는 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화훼 판매 및 농가 수익의 감소 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및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화훼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화훼융복합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시민친화적 화훼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고양시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의 화훼단지 내에 수도권 대형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허가는 어려웠으며 법령상 건립의 주체가 '지역조합'이라는 제한이 있어 '품목조합'인 한국화훼농협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 공판장 설치 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을 적극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법령 개정으로 법적 제약 해결을 통해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확정하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경기북부의 화훼유통활성화와 공항 근접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수출입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4차산업혁명으로 중앙정부는 스마트팜을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선정하

고양화훼산업단지

구분	원당화훼단지	주교화훼단지
위치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1번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4번지 일원
조성면적	25만 2,889m ²	6만 1,823m ²
분양면적	18만 909m ²	4만 7,674m ²
입주품목	육종, 장미, 난, 관엽, 분재	분화, 다육식물, 선인장
시설	육종연구소 규모	연구실동 1,419m ² (430평), 육종온실 9,758m ² (2,952평)
	화훼공동 (장미) 선별장 규모	화훼공동 (선인장) 선별장 규모 건축 305.04m ² (106평), 대지 765.23m ² (231평)

고 연결화, 자동화 및 지능화에 이르는 단계별 한국형 스마트팜을 제안하였다. 고양시는 노후된 화훼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와 스마트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스마트 원예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다. 원당 및 주교 화훼단지가 각각 2019년 및 2020년에 선정되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다. 원당 및 주교 단지의 농업용수 개발, 상수도 설치, 배수로 정비, 폐식물, 폐양액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원당화훼단지 25만 2,889m²와 주교화훼단지 6만 1,823m²로 원당의 생산농가 38개소, 선별장 2개소 및 주교의 생산농가 10개소, 선별장 1개소가 이에 해당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화훼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친화적 화훼도시 구축을 위해 스마트 화훼융복합 플랫폼인 '스마트플라워시티'(가칭)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지원했다. 화훼 생산농가의 스마트 화훼 구축을 위한 시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며,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판매 및 도농 간의 직판 등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 친화적 화훼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시민 체험, 교육, 전시, 스마트 온실 등을 통한 교육·관광 등의 사업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고양시는 1997년부터 국제꽃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고양 가을 꽃 축제, 고양선인장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화훼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또한 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식물 지원, 꽃 마을 가꾸기, 시민참여정원 운영 등을 통한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전시장 건립 기본 규모

(단위 : m²)

구분	3A전시장	3B전시장	3전시장 전체	
연면적	192,590	75,591	299,150	
전시장	46,000	24,000	70,000	
회의실	3,680	3,040	6,720	
지원시설	3,150	2,260	5,410	
부대시설	14,940	10,110	25,050	
전시장	서비스시설	4,270	1,980	6,250
	업무시설	2,400	-	2,400
	주차장	95,330(3,000대)	35,900(1,800대)	131,230(4,800대)
	공용시설	13,940	13,200	27,140
	보관창고	1,830	2,620	4,450
소계	185,540	93,110	278,650	

2. 제3킨텍스 건립

킨텍스 제3전시장은 수도권 종합 전시장으로, 1999년 건립이 확정되어 운영되는 1, 2전시장 부지 내에 추가로 7만m² 규모로 건립해 2024년까지 18만m² 규모의 국제 전시장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21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국비 1,651억 원, 도비 1,620억 원 및 시비 1,620억 원으로 총 4,8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계획에 따라 추진한 제3전시장의 건립을 위해 고양시는 2015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재요구를 통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와 11월 중앙투자심사까지 동시에 통과하였다.

3단계 전시장 정책결정 과정 및 그 결과

- 1998.07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계획(산업자원부)에 따라 16.5만m² 규모의 전시 면적 3단계 확보 계획
- 1999.04 제전시장 고양시 유치 확정
- 2003.04 제1전시장 건립공사 착공(2005.04 준공)
- 2006.03 제2전시장 건립공사 착공(2011.09 준공)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노력

- 2015.10 3단계 건립 예비검토 용역 발주(경희대학교)
- 2016.01 3단계 건립 추진(경기도, 고양시)
- 2016.07 전시산업발전심의회 심의 통과(산업자원부)
- 2017.01 예비타당성조사(제2코엑스 건립와 연계 검토) 실시
- 2018.12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통보(B/C 0.95)
- 2019.08 예비타당성조사 재요구(킨텍스→기재부)
- 2020.0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산업자원부)
- 2020.07 제3전시장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2020.12 준공 예정)
- 2020.08 중앙투자심사 의뢰
- 2020.11 중앙투자심사 통과

3. 드론센터 설립 및 드론밸리 육성사업

고양시는 한국항공대학교 기반시설 활용 및 수도권 접근 용이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항공우주드론 R&D 센터 설립 및 드론밸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사업은 D·N·A 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 모두 국비로 충당하였다. 드론 정밀 비행을 위한 통합관제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건

드론실증도시 드론활용 '시민체감형 드론생태계' 조성 사업 내용

구분	통합관제플랫폼	인프라진단 시스템 구축	귀가 안심망 서비스
대상지	고양시청	고양종합체육관, 킨텍스, 자유로, 백석동 도로	화전동, 성석동, 식사동, 탄현동, 대자동
배경	도심지 내 정밀 GPS 정보 제한	백석동 도로, 노후아파트 안전관리	범죄취약지역 보호 필요
내용	통합관제플랫폼 활용드론정밀비행	노후건물, 도로노면 외관 3D 모델링	야간정찰, 범죄자 안면인식(AI)
비행 횟수	-	270회	248회
사업 목적	스마트드론 관제플랫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리 효율성 제고	건물 및 도로 보수시점 예측을 통한 사고 예방(킨텍스, 도시관리 공사, 도로관리공사 자료 공유)	드론귀가 안심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물 및 도로노면 외관 3D 모델링을 통한 인프라 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270회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범죄취약지역 보호를 위한 야간 정찰 및 시를 활용한 범죄자 안면인식 등의 귀가 안심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8회의 비행을 실시하였다.



드론 앵커센터 조감도

드론센터 건립을 위하여 화전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드론센터 조성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0년 드론센터 설계 공모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드론 R&D센터 등의 공간구성도 협의 중에 있다.

고양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 및 경기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국방부, 1군단, 11항공단, 항공대 등과 드론 비행장 공역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인증 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해져 드론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안) 추진사업 내용

구분	추진 사업
드론 앵커센터	앵커센터 내 관제센터 구축 및 도시재생 사업 등
가양 드론 비행장	실증테스트(주중), 드론 레저 스포츠 활동(주말)
항공대 일대	MRO/제조, 인력 양성, 드론·PAV·AI 인식실증
장항동 일대	자연 생태계 감시, 실증시험, 드론·PAV 비가시권 테스트
킨텍스 전시장	문화예술 공연, 항공촬영 및 인프라 진단 등

고양시는 드론기업들과 정례회의를 주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구역 지정을 위한 구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고양드론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있다.

성과와 평가

1. 화훼산업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2020년은 고양시 화훼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생산 효율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원예기반조성사업으로 화훼농가의 노후화된 재배시설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훼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화훼 유통의 거점도시화를 위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건립 추진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통한 유통망 확보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스마트플라워유통복합플랫폼(안) 계획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통해 화훼 소비를 늘리고, 생활 속 꽃 문화 조성으로 시민 친화적 화훼도시로서의 시민 행복도 향상에 대한 기대 또한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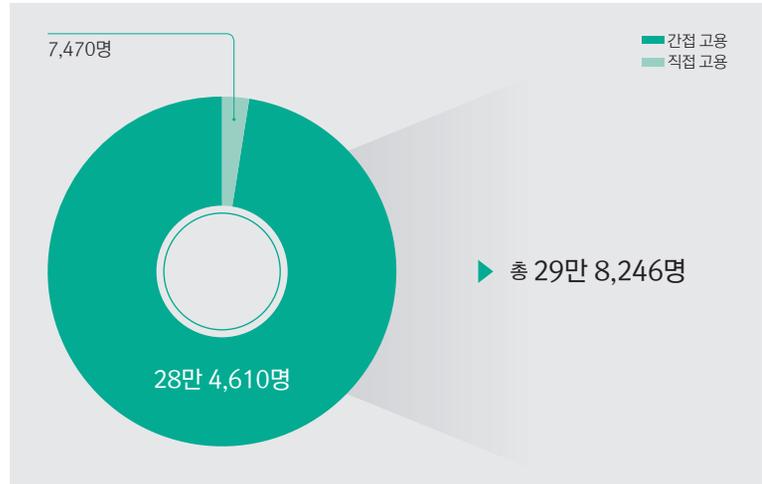
2.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제3전시장 건립으로 18만m²의 전시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킨텍스는 국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세계 25위 규모)가 기대되며, 한국 대표 전시회인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서울모터쇼, 서울식품전, 건축박람회 등의 유치로 통한 성장도 기대된다. 산업 홍보, 국제교류 촉진, 수출 등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전시, 컨벤션 개최, 행사운영 및 시설관리 인력 등 상시고용 효과가 높고 산업군별 전시회 개최 시 연관된 제반산업 분야의 간접 고용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확보에 의한 직접 고용효과는 7,470명, 간접 고용효과는 28만 4,610명으로 총 29만 8,246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킨텍스 1, 2전시장은 연간 1,382건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634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4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제3전시장 개장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0건 이상의 행사와 1,000만 명이 상의 방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킨텍스의 총 파급효과는 8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역 내 소비 등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킨텍스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다. 제3전시장은 비대면 산업환경의 가시화로 디지털 전시산업의 선도화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과 함께 경기 북부 자족기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기대효과



3. 드론센터 건립 및 드론밸리 육성

고양시는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군부대 및 관계 부처 등과도 협의를 거치는 등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체감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체감형 드론 생태계 조성 사업은 D·N·A를 드론에 활용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에 드론 R&D 기업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고, 드론실증도시로서 시범사업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론 실증도시 컨소시엄 참여한 업체 중 '아소아'가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이전했으며, 기타 참여 업체 중 다수의 기업이 고양시로 이전 의사를 보이고 있다. 드론 기업들이 고양시로 이전할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드론법 시행 이후 고양시는 드론 시범사업구역 지정이 유력하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사업 공모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선방향

1.

화훼산업

고양시 화훼농가는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경기 침체, 김영란법 시행 및 코로나19의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용토 및 박스 비용 등 생산 및 운영 비용 증가와 화훼 소비 침체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해외 동남아 시장의 부상과 함께 ICT기술에 기반하는 품질 향상 및 신선도 유지 등 품질이 보증된 화훼 상품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 화훼농가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훼 소비 및 체험, 관광 등이 어우러진 6차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저비용 고수익 구조의 화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화훼기반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기반의 정비와 자동화 및 지능화 시설 등을 통한 노동력 대체 방안 등의 모색 또한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 시장 및 사용자 맞춤형 거래 등의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른 유통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외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경매 및 이미지 경매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통센터 건립을 기대해 본다. 실감 미디어 전자화훼경매시스템의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킨텍스 제3전시장은 1, 2전시장과 달리 비대면 전시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시설 및 장비의 스마트화를 계획 단계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트윈 및 오감실감미디어 등을 활용한 전시 시설을 갖추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전시산업은 비대면 환경으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제3전시장 건립에 있어 소기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드론산업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앵커센터의 활성화가 요긴하다. 이를 위해 드론 R&D연구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및 코워킹스페이스, 드론 R&D기업 입주 공간 확보 등으로 드론산업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드론 체험 및 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내 드론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드론 실외 비행장의 부재로 지역 내 드론산업의 발전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행금지구역인 드론앵커센터 부근 등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였고, 관련 관할청(국방부, 수도권위사령부, 항공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드론 비행규제 전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드론 벨리 조성 사업으로 관련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모빌리티) 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현대자동차(PAV 사업팀)와 한화시스템(PAV 사업팀) 등의 드론연구단지 및 드론산업 집적단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론산업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2D행정에서 3D행정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드론 소음, 드론 추락, 드론 충돌’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드론 자유화 공역 설정과 스마트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드론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관 인공지능 드론 테스트베드 구조물 구축 공모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고양 드론핑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드론기업협의회 구성 및 회의 정례화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역동적 추진과 노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고양의 혁신, 남북협력을 평화경제로 전환하다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던 고양시는 정책적 난제 해결을 위해 자족 도시로의 전환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상정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 소재 의료기관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시의 비교우위 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평화의료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을 위해 협력해왔다.

지난 2년 동안 고양시는 관내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내에 평화의료센터를 개소, 고양 평화의료포럼 개최 및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한 남북보건의료 모델 발굴 연구(명지병원) 등과 같은 선도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도적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결과, 2020년 11월 통일부 장관 주재의 남북보건의료협의체 회의가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 고양시는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과 함께 ‘평화의료바이오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산테크노밸리에 평화의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양시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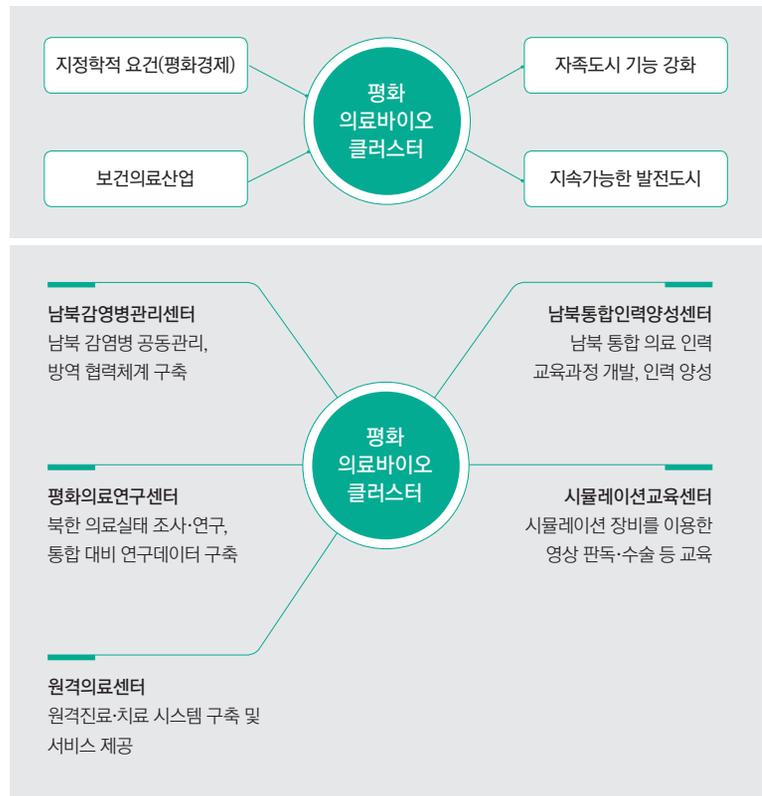
안지호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jh@gyri.re.kr)

개요 및 목표

지금까지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은 백화점식 사업 추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화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은 이러한 기존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 평화경제(남북관계 개선)를 매개로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고양시의 약점인 지정학적 요건(접경지역)을 강점인 산업구조(의료보건산업)와 연계하여 '평화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자족도시로의 전환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평화의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료바이오클러스터 구상안



사업과정과 내용

고양시는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시장 직속인 평화미래정책관은 2019년 6월 고양시정연구원에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경제특구의 방향과 전략연구 과제를 의뢰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고양시 남북경협사업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경제특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으로 나타났다.

평화미래정책관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고양시장(이재준)과 국립암센터원장(이은숙)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 결과, 후속조치의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평화미래정책관-국립암센터-고양시정연구원 간의 남북보건의료협력 실무 T/F를 발족시켰다. 보건의료실무 T/F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번의 회의를 통해 고양시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단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고양시-국립암센터-고양시정연구원간 협업체계 구축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개소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평화의료센터는 ‘남북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사업과 남북한의료용어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의료센

보건의료협력 실무TF팀 회의 주요 안건

구역의 범위	주요 안건
1차 회의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국립암센터의 효과적인 분업방안
2차 회의	평화의료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주요사업
3차 회의	고양시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
4차 회의	고양 평화의료포럼 및 국제의료포럼
5차 회의	평화의료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6차 회의	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터를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남북보건의료협력 실무 T/F는 2020년 5월 21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하고, 실무 T/F를 남북보건의료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상설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10일 국립암센터에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첨단 의료교육 및 원격 시스템, 연구기능을 갖춘 센터로 최첨단 시뮬레이션 기반 국제적 의료기술 교육훈련센터, 네트워크 기반 원격 진단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북한 보건의료 아카이브 구축, 남북 감염병관리센터를 핵심 콘텐츠로 하고 있다.

고양시 남북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인 평화의료센터는 2020년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지원 받아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행태조사,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및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020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를 통하여 명지병원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명지인문의학연구센터 황상익 소장과 고양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고양시 평화미래 정책관-고양시정연구원-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명지병원 간의 협업을 통하여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공존화를 위한 제1차 평화의료포럼을 개최하였다. 평화의료포럼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명지병원도 협력 주



평화의료센터 개소식(2020.06.10)



고양평화의료포럼(2020.07.02)

체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지병원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명지인문의학연구소는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감염병 관련 의료체계 조사 ▲북한 의료인용 신종 감염병 매뉴얼 ▲감염병 관련 남북한 의료용어 미니 사전 제작 및 공통 용어 개발 ▲감염병 관련 대면 및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명지병원 연구의 의미는 기초지자체인 고양시가 고양시 소재 민간병원인 명지병원과 협력하여 중앙정부보다 앞서 북한 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매뉴얼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고양시가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의 행위자가 결합한 효과적이면서 새로운 정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병원이 함께 만드는 고양시의 선도적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인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0년 11월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협의체 회의에서 이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 어느 곳에 남북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운다면 보건 위기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한반도는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남북 감염병 대응센터의 정책의제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 고양시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남북 보건의료 실무 T/F에서 고양시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장기적 구상으로 평화의료교육센터 건립, 북한 보건의료 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 기반 원격 진단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남북 감염병 대응센터의 중요성을 인식, 명지병원과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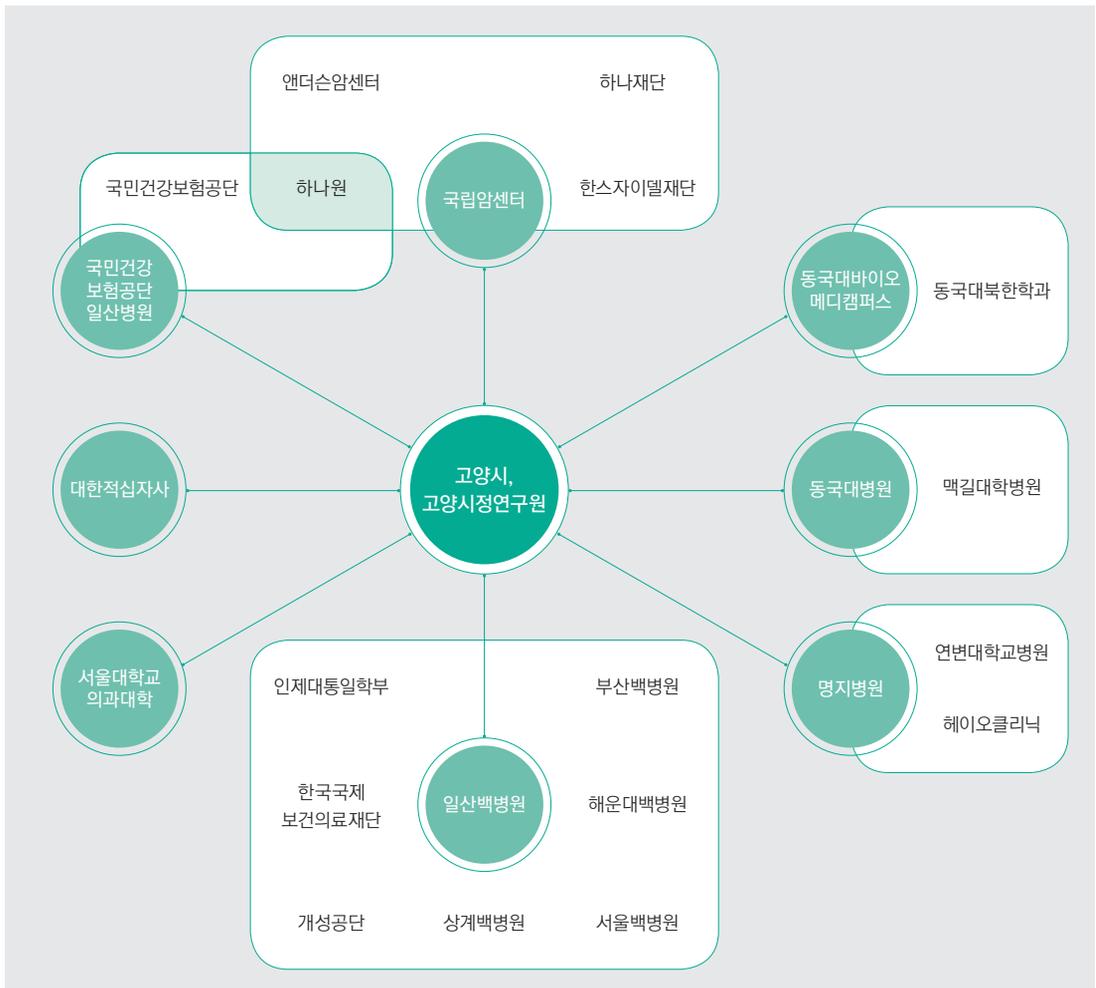


남북의료협력 모델 발굴 연구사업 최종보고회(2020.12.23)

력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교육 개발을 통한 남북 보건의료 모델 발굴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관내 5개 대형병원 외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통일의학센터)과 협력하여 남북감염병대응센터 시설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에는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이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적십자사가 새롭게 참여하여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양시 남북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성과와 평가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평화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고양시, 고양시 정연연구원, 고양시 소재 보건의료기관 간 효과적 분업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정연연구원은 남북보건의료협력 정책 방향과 논리를 개발하고, 국립암센터, 명지병원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은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며,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재정적 지원과 전반적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효율적 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양시-고양시정연연구원-고양시보건의료기관은 남북 교류협력 플랫폼인 평화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고양평화의료포럼,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모델 개발, 북한이탈주민 건강실태조사, 남북한 의료용어비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평화의료센터에서 제1회 남북보건의료협업체 회의를 개최한 것과, 중앙정부인 통일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준 것 등을 들 수 있다. 고양시의 남북보건의료협력 사례는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고양시 혁신정책의 핵심은 시와 시의 싱크탱크기관인 시정연연구원 그리고 현장 전문가 집단(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정책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개선방향

현재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에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평화의료바이오클러스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관료(고양시)-정책연구자(시정연구원)-현장전문가(고양시 소재 의료기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보건의료 중심의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고양시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양시민과 고양시 간 평화시민협약을 통해 사회통합의 핵심인 관용과 상호이해의 평화문화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고양시는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시민협약'을 연계하여 시의 미래 비전인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평화의료바이오클러스터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고양의 청년, 희망을 찾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L자형 곡선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은 '쇼크'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가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청년 '고용 쇼크 → 출산 쇼크'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과 생애주기 취·창업 징검다리 역할 강화로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세대,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청년희망 정책벨트'사업과 취·창업 및 소통을 위한 청년거점공간 '청년희망지대' 운영이 있다.

고양의 청년 정책의 우수성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에 있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과 청년들이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의 제공이라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꾸러미화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에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평가 받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양천구 주최, '2019년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로 발표하였으며,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20년 고양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하였다.

김형성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hskim@gyri.re.kr)

개요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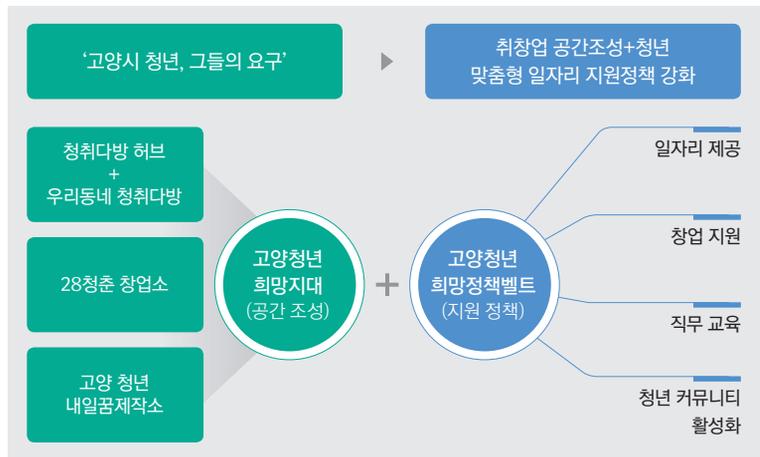
고양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및 고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지대’사업과 ‘청년희망정책벨트’의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전략은 청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취·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청년들에게 취·창업, 배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성찰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고양 청년희망지대’를 조성하였다.

또한, 장기화된 청년 고용시장 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신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취·창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을 지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 산업, 기업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미래 직업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진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층의 삶의 변화(직업 다양화, 삶의 방식, 문화, 수명연장)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일·학습·삶이 연계된 직업교육 패러다임으로 수요 전환, 생명주기 기반의 진로를 설계, 지원하였다.

‘청년희망지대’+‘청년희망 정책벨트’ 사업개요



사업과정과 내용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파악하기보다 청년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구인 청년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심의하도록 청년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양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도출된 청년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을 응원하는 도시, 고양'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고양의 청년들은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다양화 대응정책을 요

청년정책위원회

(역할) 청년정책 심의기구(시행계획 심의, 추진결과 검토 등)로 연 2회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

(위원수) 20명으로 구성됨

(임기 및 기수)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10월 1기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19년 10월 2기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청년정책협의체

(역할) 청년거버넌스(정책 제안, 의견수렴 등)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위원수) 50명+α로 구성됨

(임기 및 기수) 임기는 1년으로 2018.08.09 1기 구성(51명) 2020.01.01 2기 구성(54명)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9.05~10) 26건이 접수되었으며, 고양상상캠퍼스 등 우수제안 5건이 선정되어, 2020년 청년정책에 반영되었음

고양 청년과의 소통

(포럼) 2019.05.16(키텍스) 청년 창의적 일자리 포럼 '미래 고양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준비' 개최
(청년소통간담회) 2019.01~12 사이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청년정책 위원회·협의체,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년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청년정책 등을 제안하였음

고양시 청년 전략 및 과제

비전

청년을 응원하는 도시를 만든다, 고양

추진 과제

- 청년의 취·창업·배움·소통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 설치
- 청년 일자리·사회진입·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기화된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한 청년일자리 적극 발굴
- 청년일자리정책 통합 홍보 및 참여를 위한 청년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청년, 그들의 요구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거버넌스 (청년협의체)	청년 거버넌스 + 청년, 청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2018.04-09 •청년정책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고양시 청년현황, 실태, 정책 수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 2017.10 •인원 : 20명(청년 9) •연 2회 정기회의 청년정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 2018.08 •인원 : 50명+α •월 2회, 정기회의 청년정책 논의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소통 간담회 - 6회(2019년)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9.05-07) - 29건 중 6건 선정

구를 하였다. 고양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맞춤형 생애 경력설계를 위한 고양 청년 맞춤형 일자리지원정책 ‘청년희망 정책벨트’를 추진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시행착오가 즐거워지는 청년진로 놀이터 ‘청년일생학교’를 개설, 운영하였다.

둘째, 장기화된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 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고양 청년 인턴 지원 사업,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경험 제공 ② 주요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③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④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 ‘고양 청년 인턴 200’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업비 20억 원으로 고양시-KEB하나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간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고양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고양청년 창업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직기간의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고양 청년들에게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를 통해 취업 성공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 나래’사업을 실시하였다.

청년일생학교 운영체계



시행착오가 즐거워지는
청년진로 놀이터

일자리 박람회

- 청년 드림 JOB 콘서트

취업 지원

- 청년캣취업 사관학교
- 청년 전담 상담창구
 - 청년 심층상담
 - 그룹상담 프로그램
 - 찾아가는 특강
 - 이동상담 운영

진로 지원

- 미네르바 일자리 학교

청년일생학교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일자리+진로	청년 일자리 박람회 '청년드림 JOB 콘서트'	일자리 이슈 + 진로 트렌드 결합형 일자리 박람회 • 현장 면접, 대기업 공채 상담, 미래 일자리 탐색, 진로 멘토링, 취업 컨설팅, 청년 일자리 정책, 공감 힐링 • 연 1회, 장소 : 킨텍스
	청년캣취업 사관학교	집단 상담 + 개별 상담 결합형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 진로 로드맵에서 입사 서류&면접 클리닉까지... 취업준비 필수코스! • 자기탐색, 입사지원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모의면접, 직무 이해 • 참가비 전액 무료, 전담 컨설턴트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연 5기(기수별 5주간)
취업 지원	청년 전담 상담창구	청년 일자리 전담 상담 • 취업 지원, 진로 상담, 경력개발, 직업적응 상담, 청년 지원제도 안내 • 청년 전담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청년 그룹상담 프로그램 (2020년 신설)	주제별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 대기업 취업 상담, 직무 멘토링, NCS, 인적성, 멘토링, SI 면접 준비반 • 월 2회(격주 1회)
	찾아가는 특강, 상담	청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취업 특강, 상담 • 특강 : 대학, 군부대, 특성화고(연 4회) • 청취다방 이동 상담(매주 화, 목 14~18시)
진로 지원	창의인성 프로그램 고양 미네르바학교 (2020년 신설)	창의 인성 교육 + 프로젝트 수행형 프로그램 • 창의 인성 교육(자기탐색, 발상전환, 지역기반 이해, 심신수련) + 팀 프로젝트(협력, 소통) 수행 • 4차산업 연계 및 융합 교육(직무역량), 진로협약 기업, 멘토 연계

다음으로 취·창업 소통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을 위한 '청년희망시대'를 조성하였다. 첫째, 고양 청년 창업 메카로 이용하기 위하여 '28청춘 창업소'를 2019년 10월 건립하였다. '28청춘 창업소'는 창업공간·코워킹스페이스 제공, 제품 상용화·홍보 마케팅 등 창업 지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28개 청년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단계별(기본, 심화, 특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취업·배움·소통을 목적으로 '청취다방 Hub·우리동네 청취다방'을 조성하였다. 청취다방 Hub 1곳을 조성하여 청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민간카페와 협약하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공간·프로그램)하여, 민간카페 내에서 취업·사회진입 프로그램 진행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우리동네 청취다방을 관내에 26개소 조성하였다.

셋째, 4차산업 청년 교육 및 창작공간으로 '고양 청년 내일 꿈 제작소'를 건립하였다.

우리동네 청취다방(2019년 기준)

일산서구

- 주엽동 현양문고(주엽점)
- 대화동 카페쿠마씨
- 가좌동 지브릭커피
- 일산동 디바연커피
- 탄현동 미미쓰라운지
- 덕이동 비라티오 덕이본점

일산동구

- 장항동 로켓티어
- 마두동 301스터디카페
- 중산동 트리니커피
- 백석동 세컨드스프링
- 백석동 까렌다쉬
- 풍동 안단테
- 장항동 앙의커피
- 마두동 카페M

덕양구

- 화정동 청취다방 HUB
- 원흥동 대학생연합생활
- 원흥동 레드캡스
- 주교동 Q커피
- 주교동 힐림카페
- 삼송동 커피로즈
- 동산동 오설록
- 고양동 힐하우스
- 행신동 마음카페 민
- 행신동 커피네츄럴스퍼

고양시 우리동네 청취다방

- 집 가까이, 더 가까이
- 민간카페 23개소와 협약
- 실질적인 취업과 소통의 장소
- 지역 상권 활력
- 3355 컨설팅, 토크 콘서트
- 원데이 클래스, 마음상담, 문화·프로그램 위주 멘토링

청취다방 Hub(고양시 최초)

온라인 플랫폼 (<http://goyangjobcafe.kr>) 실내조감도 삼삼오오 컨설팅 식사를 합시다 스피치이론 및 실전

여기에서는 고양시 각 세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역 행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창작공간 제공, 노인들에게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아동대상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8청춘창업소

성과와 평가

주요 성과로는 행정의 시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이라는데 있다. 고양시는 청년 거버넌스를 통하여 도출된 정책을 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과 이에 대한 지원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은 매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희망지대'는 창업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부터 구축, 운영한 청년정책위원회와 2018년 구축·

고양 청년희망정책벨트+고양 청년희망지대 성과

사업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청년일생학교		청년일자리 전담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진로 상담/경력개발/직업적응 상담 등 • 청년 전담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 고양시,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정책제도 안내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 2018~2020년 청년 94명, 54개 기관 채용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 : 2019~2020년 청년 22명 16개 기관 채용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 2020.05~09 지역청년 34명(5개월) 채용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 2019년 상반기 채용 현황, 신규 채용 89명 중 청년 48명, 53.9%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 연 2회, 회당 80명(20일간, 주 25시간 근무)/생활임금 지급 고양청년 인턴 200 : 2020.07~12 사회복지, MICE산업, 미디어 분야 등 200명+α
청년희망정책벨트	청년일자리 발굴 프로젝트	
고양청년 창업재정 지원		청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취업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04.15~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20억 원(총 200억 원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고양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 302회(1,186만 1,000원) • 2019년도 : 545회(1,856만 5,000원) • 2020년(1~6월) : 281회(927만 3,000원)
	청년희망나래	

사업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청취다방 Hub· 우리동네 청취다방	민간카페 26개소와 협약하여 운영 : 접근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고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청년희망지대	청년 내일 꿈 제작소	구축 중 •2019.08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선정 (국비 40억 원) •2019.09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선정 (국비 10.33억 원) •2020.03 국토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2020.04 고양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0.05~2023.01 건축 설계 및 공사

운영된 청년정책협의회 등의 청년 거버넌스를 통하여, 2018년에 수립된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청년희망 정책벨트+청년희망지대 운영은 다음과 같은 외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양천구 주최 ‘2019년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일자리정책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였으며,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 동네 청취다방은 2020년 고양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청년희망정책벨트+청년희망지대의 우수성은 다양한 청년일자리 발굴, 제공과 더불어 취업 커뮤니티공간, 취업 창업공간, 청년 창업·직업교육 공간 등 청년들이 머물러 자신의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을 꾸러미화 하는 시도에 있다. 그 양적 성과도 위와 같이 풍성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보다 많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선방향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참여 등 요구가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소통과 청년 주도의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양시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청년의 삶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외부로부터 이주하여 보다 젊은 고양이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청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글로벌학습도시 고양

고양시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배움의 접근성, 배움의 다양성, 배움의 지속성을 정책적 기조로 한다. 이를 근간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응집력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고양시의 평생학습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민이 주체가 되어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부서 및 지역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2020-2024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고양시는 진흥계획의 효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UIL) 및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원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적 논의 및 상호 학습을 위한 국제 연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체계' 구축을 통해 결과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차원적인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포럼 및 워크숍의 연속적 추진 등을 통해 최근까지도 학습도시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타 시도와 달리 평생학습 전달 체계의 강화를 중요시 한다. 현재 권역 특화 학습공간 6개소를 지정,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풀뿌리 마을 학습장을 위한 평생학습카페 4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학습모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학습참여의 경로로서 평생학습 전달체계의 중간 허브 기능을 한다. 평생학습관(2023년 개관)은 평생학습 허브 및 정책 콘트론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카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습도시로의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윤신희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shyun@gyri.re.kr)

개요 및 목표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평생학습도시는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과정을 통한 개인의 역량 및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배움의 접근성, 배움의 다양성, 배움의 지속성을 정책적 기조로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응집력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의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유아에서 노인까지,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까지 전 생애, 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양시 평생학습 5개년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정을 보면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고양시민이 주체가 되어 고양시의 평생학습을 진단하고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양시 평생학습 5개년 진흥계획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정책

비전	“ 함께 배우기 좋은 동네, 고양시 ”		
목표	학습자 맞춤 홍보 및 시공간/정보 접근성 강화 홍보 전략수립 및 정보전달체계 강화 • 학습 경험의 공유확산을 위한 대상 영역별 홍보채널 다변화 • 학습활동 지원 공간 활성화로 학습생태계 기반 강화 • 모든 이를 위한 포용적 평생 학습 지원 확대	생애 전반에 걸친 '전환기 이슈' 맞춤 학습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 지원 • 시민의 자발적 학습활동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 • 시민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학습 공동체 강화	배움의 연결, 지속, 확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조직 및 평가 관리체계 구축 • 평생학습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 지속가능성 강화 • 고양형 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개인, 공동체 성장기반의 학습과정 및 성과공유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배움의 접근성	배움의 다양성	배움의 지속성

사업과정과 내용

고양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 평생학습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학습도시로의 기반을 갖추었다. 2016년에는 평생학습 릴레이 포럼을 시작으로 2019년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고양시는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학습도시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개발을 통해 성과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도시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

고양시 평생학습 현황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의 전략과제와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공간,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포털 및 웹진, 거점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 카페 운영을 확대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습자를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 지원을 위해 학습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대학, 몇시학교 등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자의 인생경로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



온·오프라인 학습정보 통합·연계 및 홍보 시스템 구축

- 지역 평생교육 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통합 DB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 학습경험 빅데이터 기반의 평생학습 큐레이션 기능 제공
- 학습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학습정보(경험) 확산

거점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카페 지정·설치, 운영

- 시민생활권, 경제활동권 등 권역별 전문학습공간 설치를 통한 평생학습관, 거점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카페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강화
- 다양한 학습실험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큐베이팅, 보급
- 기초학습, 연계학습, 심화학습 등 학습자의 전환 학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위계 설정

시민대학(재미캠퍼스)

- 지역으로 확산·실천되는 교육, 일상의 경험이 일상학습이 되며 삶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학습공동체를 위한 학습활동 및 제안 프로그램 지원정책 강화
- 개인적 성장에서 지역성장으로 연결·확장되는 사회참여 확대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시민성 입히기, 지역학 프로그램 연계)
- 고양시 전체를 평생학습 캠퍼스로 운영하는 전사적 평생학습활동 지원 모델 마련을 통한 도시 전반의 질적 성장유도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인생시계의 전환기를 위한 시민주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고양시는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를 위해 2014년 부터 ‘쫄대잡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쫄대잡이’란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양시 평생교육 현장의 리더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쫄대잡이 학교’는 ▲행복학습 정원사 양성과정 ▲문해 교사·관계자 역량 강화 ▲평생교육 강사·마을강사 학교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시민참여 리더 양성과정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교육 학교(쫄대잡이) 운영 상황

구분	2014	2019	비고(증가율)
쫄대잡이 학교	•3개 과정 운영 •80명 참여	•6개 과정 운영 •243명 참여	100% 20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카페 10개소 •행복학습센터 4개소 •32개 프로그램 운영 •480여 명 참여	•평생학습카페 38개소 •109개 프로그램 운영 •998명 참여	280% 240% 107%

쫄대잡이 및 평생학습관 건립 로드맵

주요 과제	로드맵		
	1단계(2020~2021)	2단계(2022)	3단계(2023)
쫄대잡이 학교 운영	•지표기반 연수 콘텐츠 개발(관계자 수요조사) (2020)	•성과사례 분석 및 학습도시 가이드북 발간 •관계자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2021)	•평생학습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서관, 주민자치 등 연계 대상자들에 대한 연수과정 개발 (2021~2024)
평생학습관 건립 (전달체계 강화)	•거점평생학습센터 시범 지정·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민간 및 공공시설, 직업교육(2020~2021)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민학습모임 운영 •학습관 설치(2023)	•거점 평생학습관 설치 (2020~2024)



쫄대잡이 학교

이 사업은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6년째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에도 6개 과정 200여 명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88%가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제적 성과로는 UNESCO GNLC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글로벌 학습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 확산하고 있다. 2019년 고양시장단의 UIL(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및 GNLC 회원도시 방문을 통한 학습도시 성과관리를 공유하고 주제별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이후 UNESCO UIL 소장단의 고양시 방문이 이루어져 학습도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고양시의 GNLC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4차 GNLC 국제 콘퍼런스 참여를 통해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부문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어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개발을 통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UNESCO GNLC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책무

- 회원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야의 다양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허브 역할
- 회원 도시의 사례와 모니터링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서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의 단계별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제공
- 클러스터 국제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후원, 회원 도시와 관련 파트너 간의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동료 학습을 위한 장 마련



UNESCO GNLC 네트워크 참여

성과관리체계

Phase 1. 지표 개발	Phase 2. 지표 적용 및 현황 파악	Phase 3. 결과 분석 및 방향성 모색
1-1. 선행문헌 분석	2-1. 지표 적용 조사	분석 및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지표 검토 • 도시 관련 지표 검토 • 주제별 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일반 시민 2,000명 대상 평생학습도시 지표 조사 • 고양시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도시 지표 조사 • 장애유형별 200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수집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진행 • 평생학습에 대한 현 수준 진단 및 개선 방향성 제시
1-2. 전문가 FGI	2-2. 지표 적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3~4그룹 대상 FGI를 진행하여 평생학습도시 지표 항목 및 평가 기준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여 개 고양시 평생교육기관 실태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Desk Research 	
1-3.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시민 대상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해 지표 확정 및 중요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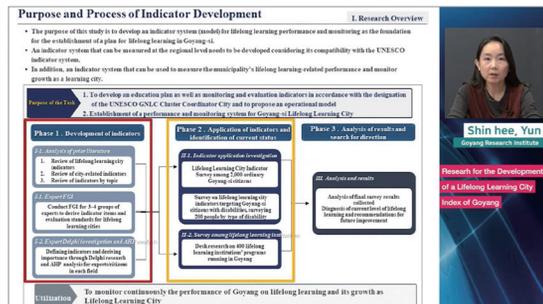
제1차 국제 연례회의 개최



국제 연례회의 이재준 시장 환영사



제2차 국제 연례회의 참여자



'고양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 발표

성과와 평가

고양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도모하고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 편익을 제고하였다.

코로나19 대비 시대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면 교육 방식과 더불어 비대면 교육 방식을 함께 마련하여 중단 없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 및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 조성 추진과 평생학습 사업 지원 및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생태계 활성화로 ‘함께 배우기 좋은 동네, 고양’을 구현하였다. 일반 시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 소외계층까지 포용하는 평생학습지원 확대와 학습자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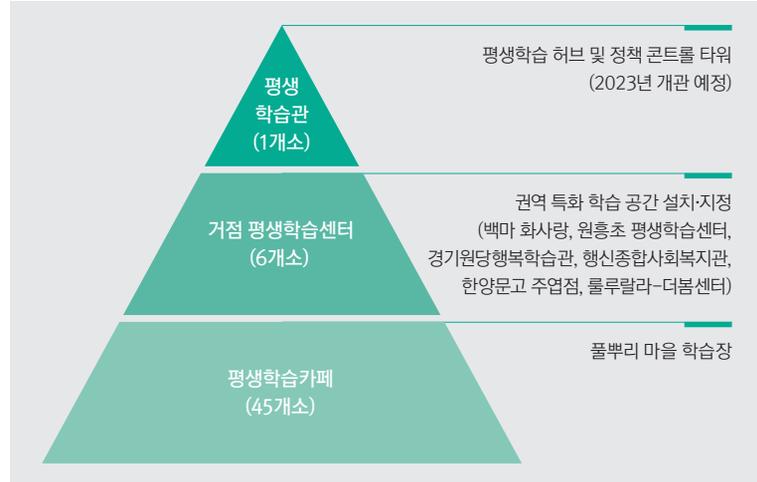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지역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쫓대잡이(평생교육 관계자 직문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원흥초 평생학습센터(학력인정 문해교육 및 자발적 학습공동체 지원), 성인 문해교육(생활 능력 향상)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요구와 특성에 맞는 학습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

고양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달체계를 중요시하여 현재 거점 평생학습센터(권역 특화 학습공간)와 평생학습카페(마을 학습장)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개관을 앞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허브의 기능을 담당하여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고양시는 유네스코 주도의 교육 관련 국제적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학습도시로의 발전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제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교육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 학습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세부적인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UNESCO GNLC ‘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클러스터 제2차 연례회의(2020.11.17)에서 전 세계 GNLC 회원도시 및 국내 평생학습도시 등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의 국제적 공유를 통해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지표개발 수정 작업에 참여하

평생학습 전달체계 강화



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웨비나(웹 세미나)를 통해 능동적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시대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성과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평생학습관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과정에서 공동체성 함양과 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평생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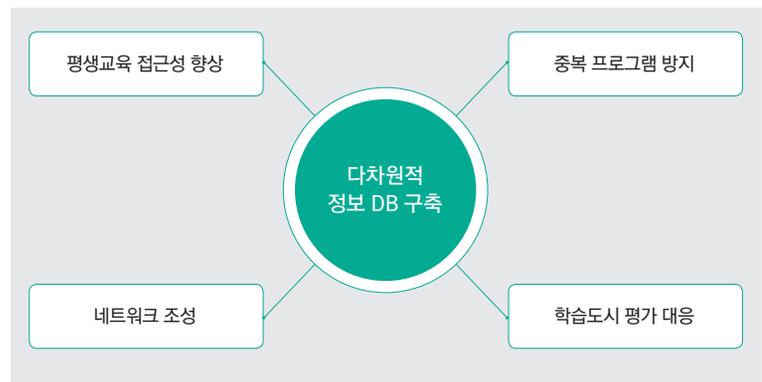
향후 개선방향

성숙한 사회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및 생활 속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성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시민의 평생학습을 뒷받침하는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포용적, 회복적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학습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품을 온라인(고양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평생교육 현황·운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요구된다. 더불어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의 다차원적 정보 DB 구축을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 네트워크 조성, 중복 프로그램 방지, 학습도시 평가 대응 등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양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자생적인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책 개선 방안





시민안심도시 고양,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최초 사례가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를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2월과 3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이래, 2021년 1월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 재난으로서 경제,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양시는 2020년 1월 22일 국내 3번 확진자 사례가 고양시 관내에서 보고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과 동시에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안이 제안되자 24일 전격적으로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도입·운영하였다. 그리고 안심넷, 안심콜 등의 일련의 '안심' 정책 시리즈들을 개발, 도입하여 선제적인 방역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는 의료진들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대규모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표적인 방역 표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출입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심콜 정책은 2020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대통령상) 사례로 선정되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공행정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었다.

이정철

(시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cleee@gyri.re.kr)

추진배경, 개요 및 목표

고양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안심’을 주제로 한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해 온 일련의 ‘안심’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안심카 선별진료소, 안심넷, 안심콜 등이 있다.

첫째,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별도 분리 시설을 통해 운영되었던 선별진료소 운영 형태를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과 결합하여 검사대상자가 차를 탄 채로 접수에서부터 검진까지의 검사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선별진료소 운영의 혁신 사례이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 체크-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 문의 및 이용자 증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대기자 간 전염 위험이 발생하였던 데에 반하여,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는 탑승 차량 안에서 바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더욱 신속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방식



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대기자 간 전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검사 대기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독·환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진의 안전과 편의성까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2020년 3월 당시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에 그쳤지만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접수부터 체온 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 소독·교육 등을 거치는 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어 검체 채취 사례 수 등 검진능력에 있어서 일반 선별진료소의 3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양시의 코로나19 대응 ‘안심’ 정책의 두 번째 사례는 고양시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안심넷(NET)이다. 안심넷은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약국과 병원을 방문하면 검사의뢰서를 교부해 선별 진료를 적극 권고하는 의약 협회와 고양시 선별진료소 간 검사의뢰 시스템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감염 여부를 모른 채 발열, 기침 등 감염 초기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 한의원, 치과 등을 방문하는 일이 일부 있었다. 고양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확진 사례를 최소화

**코로나19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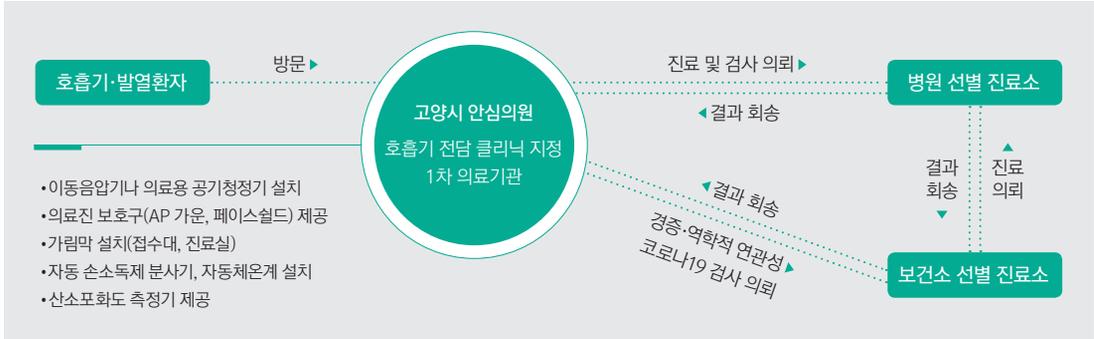
**고양시 코로나19 검사의뢰시스템
“안심넷(Net)”**

안심넷(Net)이란? 고양시 선별진료소와 의약협회의 검사의뢰시스템

- 코로나19 유증상자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방문
- 코로나19 검사의뢰
- 보건소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검사

고양시 안심넷(코로나19 검사 의뢰 시스템) 예시

고양시 안심넷 운영 방식



- 이동음압이나 의료용 공기청정기 설치
- 의료진 보호구(AP 가운, 페이스세드) 제공
- 가림막 설치(접수대, 진료실)
- 자동 손소독제 분사기, 자동체온계 설치
-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공

하기 위하여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방문하는 의약기관과 선별진료소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심넷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고양시는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겨울철에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신속한 선별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종합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약 업소를 연계한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양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동절기 호흡기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의 보건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통합 의료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통합의료체계를 통해 고위험 호흡기 질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검사 의뢰 및 진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양시 안심콜 운영 방식



STEP 1. 안심콜 출입관리 번호
[대표·관리책임자 번호] 지정



STEP 2. 전화 발신



STEP 3. 출입자 방문 기록
[발신 전화번호·입장 시간] 저장

세번째 고양시의 대표적인 ‘안심’ 정책은 안심콜 사례이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이란,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지정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로 방문 기록이 전산 관리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2020년 9월 8일부터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QR코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고양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기록이 의무화되자, 확진자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월 2일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각 시설에 지정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방문자가 전화를 발신하면 이를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4주 뒤 자동 폐기된다.

사업과정과 내용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최초로 도입·운영한 사례이다. 고양시는 국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6일 타 시·군보다 먼저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대비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현장에서 의료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의료협업체를 구성하였다. 고양시 민·관의료협력체는 관내 4개 대형병원(명지병원, 일산병원, 백병원, 동국대병원) 원장과 3개구 보건소장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20년 12월 기준 고양시 민·관의료협력체의 대책회의는 처음 구성된 1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다. 고양시는 의료협력체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1차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종합병원 간의 유기적 운영 방안, 다중밀집시설 내 출입명부의 허위기재 방지 방안, 겨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복합적 감염발생 방지 방안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등 고양시만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관의료협력체 논의 등을 통해 고양시는 당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야외 선별진료소 도입을 검토한 이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3일 만에 정책의 실제 추진까지 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양시 주교동 제1공용 주차장에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등의 장비없이 소독과 환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진료대상자가 차에 탑승하여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당시 고양시는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위해서 13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의 보건소, 고양시 의사회, 군의관·군인, 민간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진료소를 운영하였다.

고양시의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자 2020년 4월 20일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2020년 12월 11일부터 고양시는 지역 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재개된 안

심카 선별진료소는 매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고양시민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고양시의 안심넷은 코로나19 의심자가 고양시 의약협회에 가입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진료한 확인서와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선별진료소에 검사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지역의 보건소에서 의심환자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 의뢰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한다.

고양시는 안심넷을 활용한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에 21개소의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17개소, 병원 2개소, 보건소 2개소가 포함되었다. 고양시는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동네병원 등을 비롯한 1차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합적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고양시에서는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와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 종합병원 간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고양시의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QR코드 및 키오스크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를 병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의 보건의료 네트워크는 의료기관 의료진이 호흡기 질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상황에 맞는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환자의 선별을 통한 대기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안심콜 사례로 고양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기록이 의무화되자, 확진자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각 시설에 지정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방문자가 전화를 발신하면, 이를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에 관한 정보 구축에 활용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9월 14일 관내 경제단체 간담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부터 기존에 일부 관공서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음식점·뷔페·목욕탕·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성과와 평가

고양시의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2020년 2월 26일부터 9월 18일(실운영일수 95일)까지 총 5,499명이 이용하였다. 당시 이용 가능 대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개인병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 의뢰서를 받은 경우, 자가 격리 대상자 중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었다. 그리고 12월 11일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고양시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차 운영 시기(2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54일)에 3,478명이 선별 진료를 받은 가운데 1,800명의 검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2차 운영 시기(8월 9일부터 9월 18일 까지 41일) 동안에는 선별진료 2,021명 전원의 검체 검사가 이루어졌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해당 기간동안 12명의 양성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기여하였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2월 26일부터 9월 18일(실운영일수 95일)까지 운영되는 동안 민관 의료 체계에 기반한 관내 병원 의료진(의사회, 종합병원), 모범운전자, 군인력, 경찰, 구청·보건소 등 총 2,138명의 지원 인력이 투입되어 민·관·군 협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대응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성과

(단위: 명)

1차 운영시기	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선별진료	3,478	1,319	531	481	295	342	258	178	74
검체자	180	518	251	227	170	249	187	141	57
확진자	4	-	1	2	-	-	-	-	-

2차 운영시기	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선별진료	2,021	854	738	215	116	52	46
검체자	2,021	854	738	215	116	52	46
확진자	8	2	4	2	-	-	-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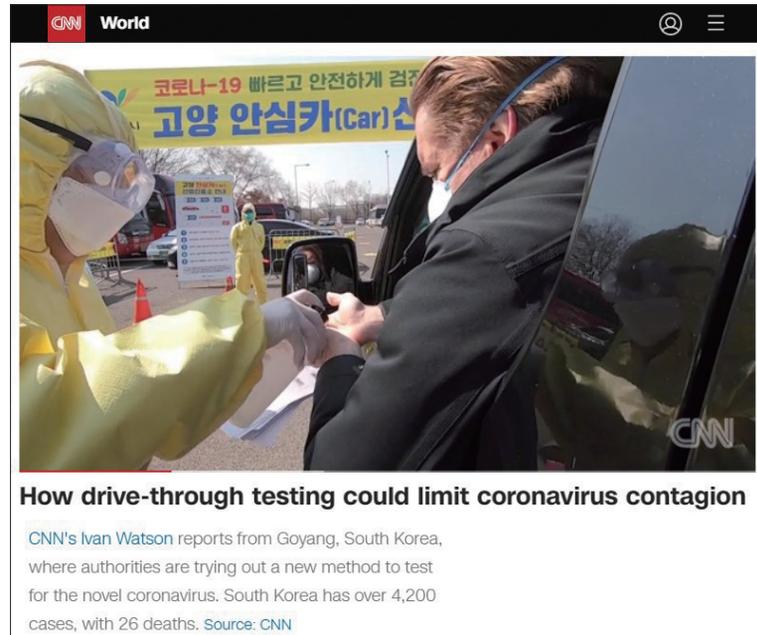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는 국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표준 운영 모델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된 데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K-방역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체계가 ISO표준안으로 추진되는 등 코로나19 K-방역 모델의 기틀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예로 국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BBC, CNN, NBC, AFP 등 외신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로 극찬하였으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외 민간분야로까지 벤치마킹이 확산되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고양시 안심넷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총 417명의 유증상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이 과정에서 총 3명의 확진자를 선별하였다. 고양시의 안심넷은 1차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대응기관인 선별진료소·보건소와 의료협력체계를 구축, 코로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주교 제1공영주차장) 운영 현장 사례



***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제한하는 방법**

CNN의 이반 왓슨은 당국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국 고양시에서 보도했다. 한국은 확진자가 4,200명이 넘고 26명이 사망했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CNN 조명(CNN 홈페이지 동영상 보도자료)

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다.

고양시 안심콜은 고양시 관내의 약 1만 3,600여 개 업소가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한 업소를 대상으로 고양시는 약 3억 3,600여만 원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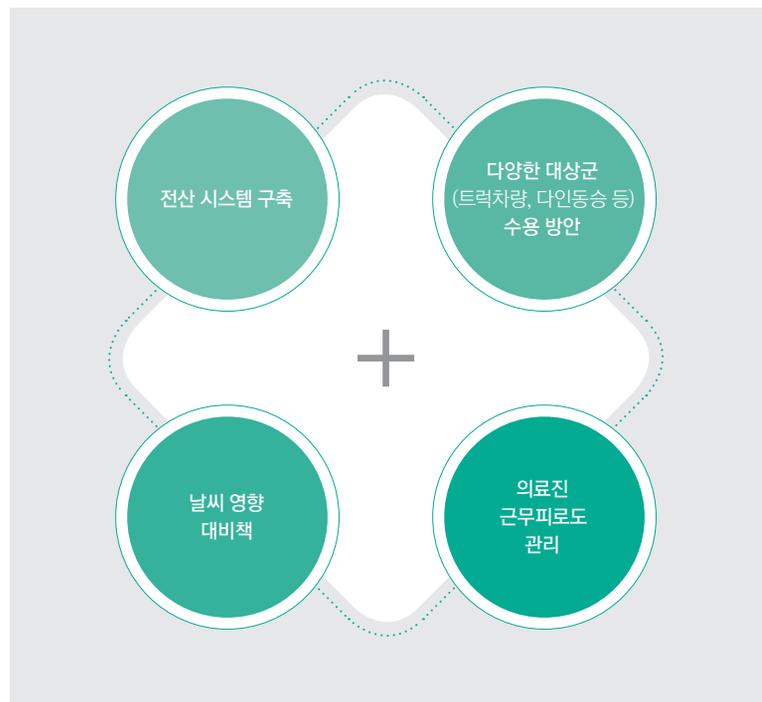
고양시의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QR코드 인증에 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기로 작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전통시장, 관공서, 대형점포 등 다양한 시설에 도입되었다. 고양시 안심콜 시스템은 효용성을 인정받아 9월 12일 중대본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20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향후 개선방향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기하면서 의료진과 대기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야외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복 검사자 발생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향후 1인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선별진료 시스템으로 다양한 대상군(트럭 차량, 다인동승 등)을 수용하기 위한 대비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방 형태의 특성상 태풍, 폭우 등 날씨의 영향에 취약하여 운영이 중단될 수 있거나 폭염, 한파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의료진의 근무 피로도도 누적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노력 또한 요구된다.

정책 개선 방안





고양의 복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다

고양시는 4대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를 표방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비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복지도시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안락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복지,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정책과제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70세 이상 치매 무료검진 등 치매안전망 구축', '전시민 대상 자전거안심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고, 중장기적 정책과제로서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시민안전체험관)설립 및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의료지원 확대', '평생학습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강조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의 체계화 노력과, 안전 의식 생활화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 측면에서의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 복지 실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은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우수사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상, 경기도 마음건강 우수프로그램상 등을 표창받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운영'사례와 시민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정철

(시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cleee@gyri.re.kr)

개요 및 목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관리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시스템 곳곳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타격을 준 코로나19는 돌봄 영역의 공백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과제를 야기하였으며,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안전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질병,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서비스 확대 등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안전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까지 보장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 또한 민선7기 4대 시정목표 중 하나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 도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복지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혁신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의 예로서 고양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치매안전망 구축,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시민안전체험관)설립 및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 평생학습관 설립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적극적 복지정책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면, 첫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될 만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정책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양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고양시는 6대 분야 안전도 평가 가운데 생활안전 분야가 유일하게 1등급으로 가

고양시 지역안전지수 부문별 현황(2019년 기준)

연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15	2	2	2	2	2	2
2016	2	1	2	1	2	2
2017	2	1	2	1	2	2
2018	2	2	2	1	2	2
2019	2	2	3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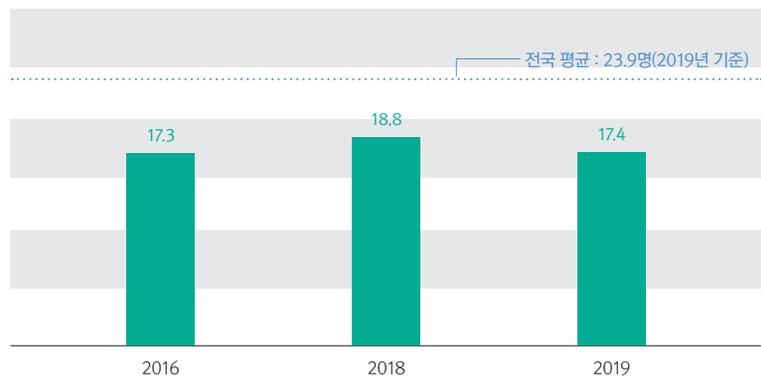
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자살 부문은 2등급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총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의미하는 자살률 또한 26.9명으로 0.3명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부문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1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의 최근 3년 동안(2014년~2016년)의 자살 사망자 수는 평균 255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의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자살 사망률은 2016년 17.3명에서 2018년 18.8명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2019년)에는 17.4명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전국 평균(2019년 기준 23.9명)과 비교하였을 때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자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2016년과 2019년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가시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0대부

고양시 최근 3년 자살 사망자 수

(단위: 명)



터 30대까지 청소년,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 빈곤, 은퇴 등으로 인한 역할 상실감, 소득 양극화, 질병 등으로 노인의 자살 증가 또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자살률의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가 요구된다.

고양시는 자살 및 자해 시도 등을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센터(부설),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질환별 전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토닥토닥 버스'를 구축, 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등록 회원 가족상담 조성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서 고양시는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고양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대표적 노력 사례로서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시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 추진이 있다.

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시민 안전마스터 제도는 민선7기 대표 공약사항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체험)을 통해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반복적인 학습과 실천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교육의 생활화로 108만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로 도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각 유형별 안전사고 대처 요령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행신동에 자리한 민방위교육장을 시민들의 재난안전 지식과 각종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Life-Cycle) 실용적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안전마스터 이수증을 발급하여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실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고양시는 시민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을 통해 고양시 차원에서 주입식 안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체험식 교육을 시행하여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요령 숙지와 안전 의식 개선을 추구하였다.

사업과정과 내용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 고양시 정신건강사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이동상담버스 ‘토닥토닥 버스’ 추진안과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설치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9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기존의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양시(알코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 가족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적응 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인 정신재활시설을 1개소 확충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운영을 위한 일련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개소식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관련 추진 성과 및 계획

단위사업	2018.06	2019	2020	2021(추진계획)
자살예방센터 설치	예산 확보 등 최초 추진	센터개소(이행완료)	-	-
토닥토닥 버스 구축 운영	예산 확보 등 최초 추진	정신건강상담 버스 구축	찾아가는 정신 상담버스 '토닥토닥 버스' 지속운영	-
중독관리사업 지원 확대	-	전담인력충원(1명)	경기도형 알코올 중독관리시범사업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설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특화사업 구축
가족쉼터 조성 및 정신재활시설 확충	-	추경예산 확보 가족쉼터 조성	정신재활시설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노력을 통해 고양시는 기초지자체로서 지니는 권한과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경기도 알코올중독관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고양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대상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서비스 '토닥토닥 버스' 발대식

둘째, 시민안전체험센터 설립 및 시민안전마스터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고양시는 고양시민들의 안전 문화 확대 및 안전 의식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민안전교육장(행신동 소재)의 리모델링을 통해 2019년 당시 5개 안전교육(체험) 프로그램을 8개로 확대 및 개선하고 체험 기반의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시민안전교육장은 2020년 7월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안전체험시설 및 콘텐츠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마스터 이수증을 발급하는 시민안전마스터 제도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교육장에서 운영중인 시민안전체험교육 이수 후 고양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시민안전교육장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보안관, 학교전담경찰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재난전문가 집단인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행정안전부 등록 재난안전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의 내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민안전체험센터 개소 준비와 함께, 고양시는 안전 교육의 기회 확대와 접근 편의성 제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동별) 시민안전지킴이 대원들이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범죄예방활동, 안전생활 위험요소 모니터링과 신고활동 등 지역사회의 위험요소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 체험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청각 교육 및 안전 체험 교육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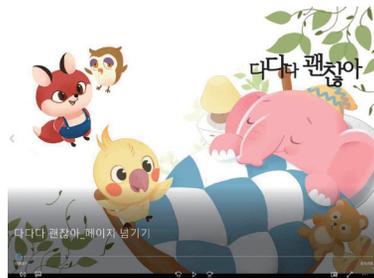
시민안전체험관 콘텐츠 등 운영 개선 계획



성과와 평가

고양시는 정신건강 복지 확대 운영 추진 노력을 통해 2021년 2월 현재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2개소(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화, 세분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 및 확대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자해 예방 콘텐츠 개발, 웹툰 제작 등의 비자살성 자해 청소년 기획 사업, 영유아 정신 건강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 e-book 및 동화책 제작, 고양시 약사회·대한적십자사와의 연계를 통한 생명사랑거리 조성, 생명사랑 영화제 및 힐링 토크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여 생명사랑 영화제 및 힐링 토크의 경우 2회차 동안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자살 위기 관리 및 응급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의 예로서, 고양시는 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및 경



영유아 정신건강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 e-book



아동청소년 대상 비자살성 자해예방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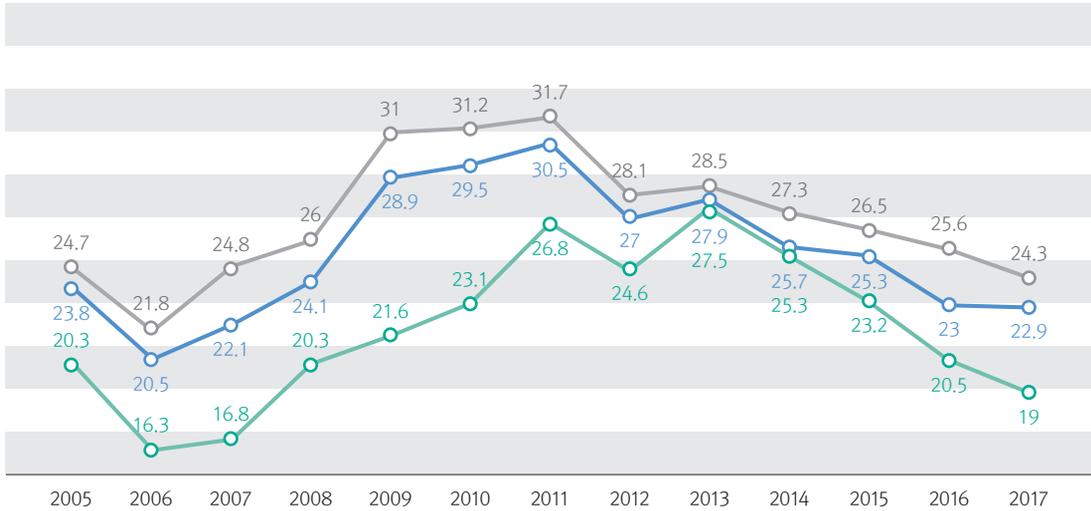
고양시 약사회와의 '생명사랑약국'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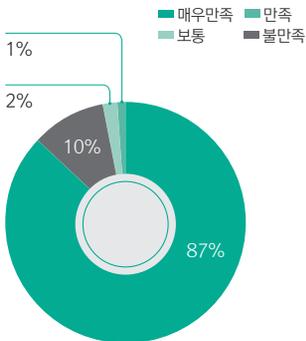
생명사랑영화제 및 힐링토크콘서트

자살률 추이

○ 고양시 ○ 경기도 ○ 전국



토닥토닥 버스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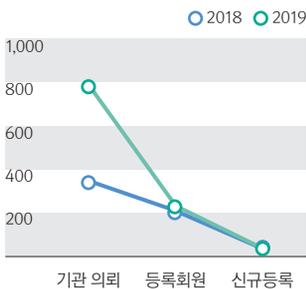


찰서 자살 사망자 자료 공유를 통해 분기별 자체 자살 DB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명사랑마을, 생명사랑약국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고양시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협의체(9개 기관 참여) 및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체계 협의체(15개 기관 참여)를 구성하여 무료 법률상담 지원,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성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2020년 자살예방사업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2020년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55회에 걸쳐 2,000여 명이 이용한 마음아 괜찮니! '토닥토닥 버스' 운영 사례의 경우 이용시민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개소 이후 전년도 대비 등록 회원 및 신규 등록률이 각각 10% 증가하는 한편, 고양시의 자살률은 5년 연속 감소(2013년 27.5명→2014년 25.3명→2015년 23.2명→2016년 20.5명→2017년 19명)하여 고양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살예방센터 개소 전, 후 이용 현황 비교



고양시는 안전 교육 확대와 안전마스터 제도 도입을 위하여 시민안전교육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재난교육 MOU를 체결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문화 생활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학생 안전 리더를 선발하여 시민안전교육장에서 심도 있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지진 등)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안전마스터 이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자원봉사점수 부여 방안 등 향후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개선방향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로서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질환자 등과 같이 돌봄 서비스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운영 방식의 보편화로 인하여 더욱 복지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마음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대응·관리 노력 등 비대면 사업의 질적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디지털기기 숙련 교육 도입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진행하는 한편 코로나 블루 현상 등을 호소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성화 노력 또한 요청된다.

둘째로, 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시민 안전마스터 제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현재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의 각종 재난 상황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고양시민의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교육지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시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민안전체험관 및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유치원, 초등학교 등), 안전 지키미 앱 보급과 위험 대비 체험 등의 확대로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양의 환경, 지속가능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다

고양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선정 이후 급속한 발전을 통해 국내 핵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민선 7기 고양시 비전에는 ‘빠르고 깨끗한 쾌적도시’ 및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 가능한 선도적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환경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고양시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다섯 가지에 대해 주요 내용, 성과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①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 ②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추진
- ③ 장항습지 람사르 협약 추진
- ④ 미세먼지 대책 추진
- ⑤ 주민 친화적 환경처리시설 구축

임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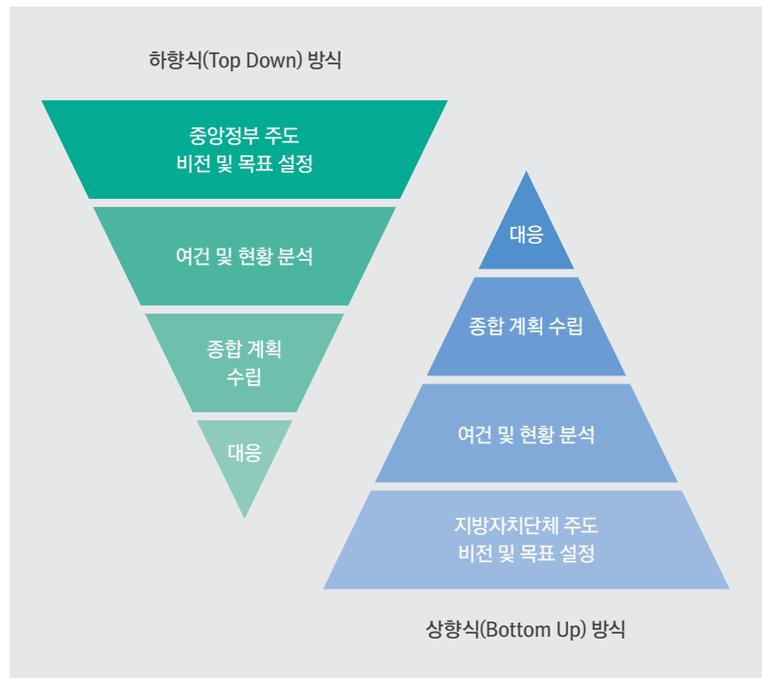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yim@gyri.re.kr)

개요 및 목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에 관측되지 않았던 이상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추진 및 의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고양시도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하향식(Top 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 Up) 방식



사업과정과 내용

1.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파리협정 파리기후변화협약 :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 더 나아가 1.5°C 이하로까지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고양시에서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구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팀, 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후 자체적인 연구 용역, 부서 간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19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야	전략	실천과제	세부사업	예산(억 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ton CO ₂ eq)
건물	4	17	40	10,143	912,008
수송	4	13	23	10,231	858,995
폐기물	4	8	10	3,946	180,028
농축산	3	5	5	63	10,298
토지	1	3	4	55	9,809
대응기반	1	7	10	94	268,400
종합	17	53	92	24,531	2,257,538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주요 추진 사항

- 고양도시포럼을 통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상 정립
-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위한 고양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협약 체결
-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개최를 통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의지 전파
- '제1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을 통한 고양시 탄소 발생 현황 점검 및 탄소저감 방안 논의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 구성(242개 단체)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시민 및 환경단체 대상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 대책 연구용역 추진
-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2.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추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2020~2030)’을 수립(6개분야, 17개 전략, 53개 실천과제 및 92개 세부사업)하였으며, 2030년까지 BAU대비 32.8%(2,257,538 ton CO₂eq)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이행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기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및 수소에너지 등)로 대체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양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유휴공간 활용, 시민 참여 및 협업 행정이며, 각 전략 내용은 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선도적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선순환 그린사업 기반 마련, 에너지복지 실현 등 주요 추진 사항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고양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전략

전략	내용
유휴공간 활용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지 및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환경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시민 참여	시민 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으로 발전수익금을 통한 지속적 시민햇빛발전소 확대 유도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협업 행정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우리시 재정건전성 확보

고양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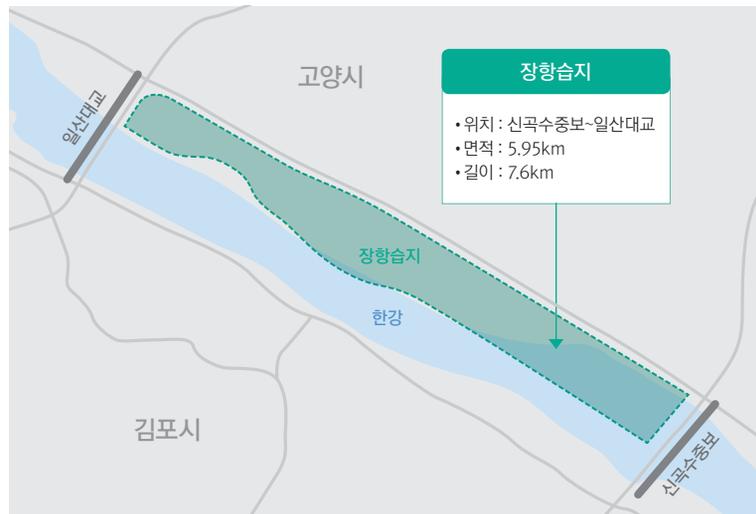
- 친환경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 지속적 확대 추진
-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익창출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 수익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투자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선순환 그린사업 기반 마련
- 공공부지 임대를 통한 시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활성화 유도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저탄소·친환경사회로 전환 추진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복지인프라 부족지역 등 비도심지역 27개 마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 고양시·한국도지주택공사 협약 체결에 따른 전국 최초, 향동지구 LH 공공임대주택 2개 동 전 세대(498세대) 미니태양광 설치 추진

3. 장항습지 람사르 협약 추진

고양시 장항습지에는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이동하는 물새인 재두루미·저어새·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0여 종을 비롯하여 매년 약 3만 마리의 새들이 도래한다. 조수간만으로 형성된 갯골과 버드나무숲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그 중 말뚝계와 버드나무의 공생관계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습지는 탄소저장고로서의 가치가 높아, 세계적으로 습지를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도 장항습지의 생태학적 가치홍보, 고양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습지 보전 등을 위해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통해 장항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양시는 장항습지의 생태학적 가치 홍보, 고양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습지 보전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을 결정하고, 추진전략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5월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 등록되었다.

현재, 고양시는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육화 방지(물골복원)사업, 외래식물 제거 사업 및 폐기물(쓰레기)처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가치 홍보 및 시민 환경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 장항습지

고양시 장항습지 람사드 습지 등록을 위한 추진 전략

전략	내용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우선등록 추진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우선 등록하고 추후 한강하구 전체를 등록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내 관계기관 협조체제 마련	환경부, 한강청, 국립습지센터, 파주시·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고양시 입장 관철
국제기구 가입 및 국내외 람사르습지 운영단체와의 협력 강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이트 등재 등 국제기구와 교류 및 국내외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 국립습지센터, 습지관리 우수 타시군 등과 람사르습지 관련 민·관 교류, 파트너십 확대,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
람사르습지 등록 및 관리방안 마련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장항습지 보전 역할 분담 및 람사르습지 등록 논의

고양시 장항습지 람사드 습지 등록을 위한 추진 경과

일자	주요 경과
2019.05.10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재
2019.12.04	환경부 한강하구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결정
2020.01.15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20.01.31	토지조서, 지적현황 및 람사르습지정보양식 기초 자료 작성 및 제출
2020.10.22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신청

고양시 장항습지 보전 및 복원 사업 추진 현황

- 장항습지 육화방지(물골복원) 실시설계
- 장항습지 생태통로 수목식재 및 가림시설 설치공사
- 쉼터(무논) 및 생태동빙(2곳) 조성
- 장항습지 탐조대 인접 자유로변 차폐·경관 식재
- 장항습지 내 폐세류시설 철거
-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보조금 사업
- 장항습지 하구쓰레기 위탁처리
- 2020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및 사업 추진

4. 미세먼지 대책 추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 유발, 생활환경 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도심 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는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미세먼지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고양시의 핵심 전략은 첫째, 중앙 통합 관리 체계를 주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응급 감축 시책 실시. 셋째, 자체 배출량 감축을 통한 중·장기 저감대책 추진.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외부 협업 강화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였다. 고양시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정책은 미세먼지 대응예산 확대 편성,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이 있다.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추진 정책 주요 추진 정책

계획	내용
미세먼지 대응예산 확대 편성	2018년 132억 원 → 2019년 441억 원 → 2020년 491억 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버스 전환 사업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및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등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수행	장항습지 보전 만·관·학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시민감담회 및 정기 자문회의 등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

5. 주민 친화적 환경처리시설 구축

고양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는 효율적 폐기물(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등) 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과거 폐기물 관리의 핵심 개념은 에너지 및 자원을 소비하며 유해한 폐기물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폐기물을 물질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접근하는 개념(폐기물 자원화)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관리 개념의 변화는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전 등의 전 지구적 문제와 연계되어 전환 필요성 및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고양환경 에너지시설 및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환경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및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15
원리
소각
건설비
1,130억 원
시설용량
300톤/일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
원리
혐기 소화
건설비
692억 원
시설용량
260톤/일

하는 유해부산물질 관리 및 운전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처리시설 인근 시민들과 정기회의 추진, 체육센터와 같은 친시민 시설 도입, 악취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친화적 환경처리시설 구축 주요 추진 사항

구분	추진 사항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 정기보수 실시(매년 3회 실시) 및 다이옥신 배출 측정
	소각장 친환경 변화 노력 추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통 강화
	소각장 주민편의시설 백색체육센터 시설 개선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정기보수 실시
	음식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회의 실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실시

성과와 평가

1.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양적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기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대비 약 2%인 44,031ton CO₂eq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달성하였다.

질적 성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경기도 1위', '2020 환경부 그린시티 우수지자체 환경부장관상' 및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성과

구분	추진 사항
양적 성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2020년 6월 기준) → 44,031 ton CO ₂ eq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경기도 1위
	2020 녹색기후상 자치부문 1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질적 성과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분야 최우수 수상
	2020 환경부 그린시티 우수지자체 환경부장관상 수상
	2020 고양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추진

고양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3,423kW/년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연간 3,140 ton 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나무 56만 1,160 그루를 심는 수준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에도 기여하였다.

시민 접근성 및 이용성이 높은 공공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시민인식 전환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 장항습지 람사르 협약 추진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정책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달성한 성과는 첫째,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 핵심적 성과이다. 둘째, EAAFP 등재를 통해 장항습지의 우수한 생물 다양성 및 이동성 물새 서식지로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장항습지의 건강한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황새를 포함하여 장항습지에 도래하는 철새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시민들에게 장항습지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탐조대를 개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및 환경 교육을 통해 장항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참여 유도 및 홍보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고양시는 장항습지 생태 환경 보전 및 현명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 장항습지 람사르협약 추진 정책 주요 성과

-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요청 완료
-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 장항습지 탐조대 개관
-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및 복원
- 장항습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환경 교육장 활용

4.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고양시가 추진한 미세먼지 대책 성과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양적 성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확대 등이 있다. 질적 성과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과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추진 정책 성과

구분	추진 사항
양적 성과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자동차 1,200대, 전기버스 37대, 전기이륜차 334 및 수소전기차 11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 19,573대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및 장비 전면 교체 쿨링&클린로드 (Cooling & Clean Road) 설치사업 → 화정역 L=200m
질적 성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에 따른 시민 만족도 증대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2018년 31만 2,296, 2019년 24만 5,950, 2020년 191만 3,300 → 공기청정기 지원 : 2018년 949대, 2019년 971대, 2020년 994대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사업 우수사업 선정 → 정부정책사업으로 확대 추진

5. 주민 친화적 환경처리시설 구축

최근 3년(2018년 ~ 2020년 10월)간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6만 톤/년 이상(총 19만 726톤)의 생활폐기물 그리고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6만 5,000톤/년 이상(총 20만 6,222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여 각 25억 원/년(총 83억 원)과 10억 원/년(총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3년간(2018년~2020년 10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 환경교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및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 성과

시설	분류	2018	2019	2020	합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처리량(톤)	60,847	69,035	60,844	190,726
	판매수익(백만 원)	2,671	3,025	2,600	8,296
	견학인원(명)	2,127	2,486	-	4,613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처리량(톤)	67,088	73,263	65,871	206,222
	판매수익(백만 원)	1,006	1,813	1,240	4,059
	견학인원(명)	453	488	199	1,140

향후 개선방향

1.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먼저, 고양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및 ‘고양시 녹색건축설 계기준’ 제정 준비 및 LH 공사 협약 등 행정적인 절차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 외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강제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즉, 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참여가 필수지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 건축물에도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발생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부 사업 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이외에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선도적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2.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추진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및 보급을 통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부분은 앞서 기술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다.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을 민간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 의무 대상 건축물 용도 또한 확대 추진하여 용도별 에너지 공급의 무 비율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가소비용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액 자체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보조사업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장항습지 람사르 협약 추진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장항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추진 정책이 필요하며, 장항습지 육화방지(물골복원 등)사업으로 습지생태계 기능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도모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멸종위기종의 철새 보전 정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항습지 현명한 이용 및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항습지의 현명한 생태체험 이용시설 구축, 습지생태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시민 체감 생태계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항습지 보전 민·관·학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항습지 생태프로그램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이다.

장항습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가치 평가와 고양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항습지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추진이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고양시는 건강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경유차 감축, 운행제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 등 획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고양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기 및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대응 대책 수립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고양시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향상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민 친화적 환경처리시설 구축

고양시는 효율적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및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비 시설 용량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고양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용량확보 계획



고양바이오메스에너지시설 조감도(고양환경에너지시설 홈페이지, <https://ene.gus.or.kr>)

수립이 필요하다. 고양시에서는 인근 지자체와 광역 소각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소각장 용량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바이오메스에너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감소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해당 시설의 정밀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 처리 효율 확보 및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에 대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



고양의 교통, 더 편리해진다

고양시는 1992년 시 승격 이후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에서 2020년 인구 108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도시 규모의 급격한 성장과 달리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광역교통망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서울 방항으로의 광역 통행이 많은 고양시 통행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에는 열악한 광역철도망에 따른 극심한 혼잡과 자유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만성적인 도로정체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양시민 대상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 역시 교통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구 108만의 고양시는 2022년 1월 고양특례시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교통망도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청사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역 교통망 문제해결 및 미래 교통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 고양시는 민선7기에 이르러 다양한 광역 철도망 사업 추진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갖춘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를 비롯한 서해선(일산~소사선, 기존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과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양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기존의 일산선, 경의중앙선과 함께 수도권 어느 지역이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와 더불어 고양시민의 접근성 확보 및 출·퇴근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추진을 비롯한 경의선 증차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baek@gy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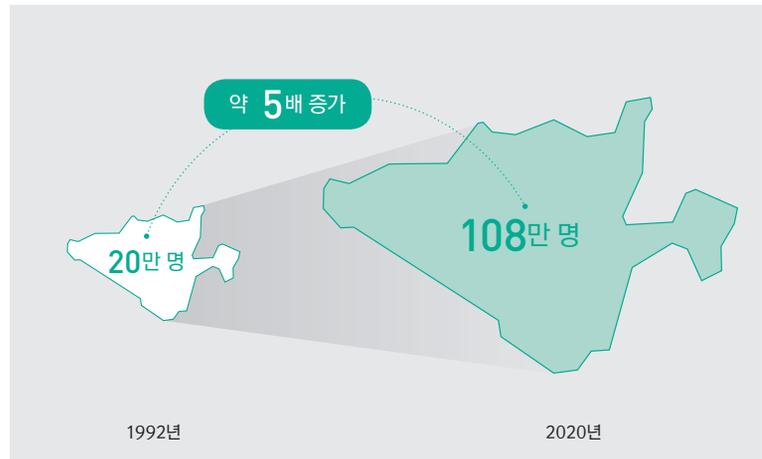
개요 및 목표

고양시는 도시 성장 특성상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량이 수도권 통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지난 30년간 인구 108만의 전국 9대 도시로 성장한 고양시의 광역철도망은 일산선(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선)과 경의중앙선이 전부였다. 그러나 노선의 굴곡도가 심하고(일산선), 혼잡도가 심해(경의중앙선)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원하는 고양시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광역철도망과 함께 고양시민의 출·퇴근 통행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역시 서울역 방향으로 편중되는 등 서울 방면의 노선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교통소외지역과 신규 택지 개발사업이 많은 고양시의 여건에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역 신설 및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한층 촘촘해진 내부교통망을 구축하고 고양시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 자족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확대 등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고양시민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고양시 인구 증가량



사업과정과 내용

고양시는 기존 철도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외에 신규 철도사업(GTX-A, 대곡~소사선)과 장래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신분당선, 일산선 연장 등)을 통한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권역별 철도교통망 투자를 위해 수립 중인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년 상반기 고시 예정)에 고양시 권역 내 5개 철도 노선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신규사업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고양시는 신규 철도사업과 장래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은 물론 기존 철도노선(경의중앙선)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코레일에 경의선 증편 및 증차를 요청해왔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고양시는 물론 경의중앙선이 출발하는 파주시의 택지개발로 인한 폭발적 인구 증가에 기인하여 경의중앙선은 해마다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배차간격으로 인해 경의선 화전~수색 구간은 혼잡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고양시 반영요구 사업

연번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 필요성
일반철도	1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수도권 서북부 지역 철도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간 교류 및 철도수송 활성화
	2 통일로선	삼송~금촌(신원, 관산, 내유)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접근성 개선
	3 교외선 복선전철화	대곡~의정부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성 일부 구간인 교외선의 전철화를 통해 경기북부 주민 교통 접근성 개선
광역철도	4 고양선	새철~식사	고양시 철도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도심 접근성 향상
	5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독정~중산(결포북변, 킨텍스, 주엽)	수도권 서북부 지역(인천, 김포, 일산) 철도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간 교류 및 철도수송 활성화

경의선 운행현황

구분	상·하행선	운행횟수
경의선 (서울~문산)	평일 상행(서울 → 문산)	29회(급행 8회)
	평일 하행(문산 → 서울)	29회(급행 8회)

도가 약 170%에 이르는 상황이다. 경의중앙선 용문~문산 구간의 출·퇴근 열차는 8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경의선 서울~문산 구간은 4량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 수요에 비해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고양시는 2019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경의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을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 건의하였다. 이어 2020년 5월과 11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방문하여 경의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증량 및 증차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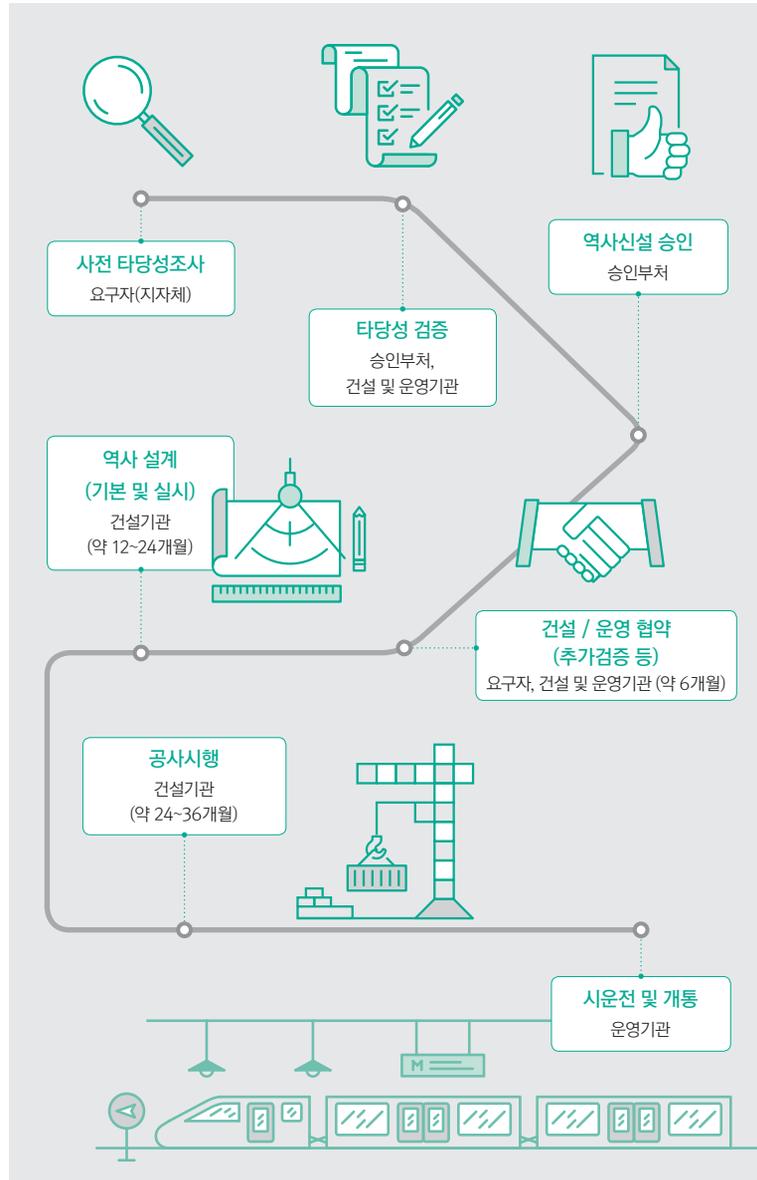
또한, 고양시는 간선철도망의 확충을 통한 이동성 확보와 더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7기 대표적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물론 신규택지개발지구와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출·퇴근 이동편의 증진 등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양시는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동역 신설을 최초 건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20년 2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4자간 사업점검회의를 추진하였다.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 중간역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광역철도망은 물론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노선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양시 내부교통체계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버스는 교통소외지역 및 신규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을 신설 및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광역철도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 서울 방면으로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노선 확충 필요성에 따른 이용자 수요예측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기존 노선별 분석(대체교통수단 검토), 운송사업자 의견 협의(경합성, 타당성 등 검토), 재정지원 여부 및 이용편익 등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서울 방면의 노선을 다변화 하기 위해 서울시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시행하였다.

역사 신설추진 과정



성과와 평가

새로운 철도망 구축을 위한 민선 7기 고양시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GTX-A 노선이 2018년 12월 착공식을 갖고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10월 발표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비전 2030'에 고양시 사업 구간 6개가 반영되었다. 더불어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고양선), GTX-A 창릉역 신설, 대곡~고양시청~식사지구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이 확정되었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모두 증차에 난색을 표명하던 경의선 역시 3편성 증차(4량→6량)가 확정돼 고양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고양선의 식사지구 연장을 요구했던 고양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을 통해 GTX-A, 고양선, 교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 서울 강남과 강북, 의정부, 부천 등 광역철도망과 연계하면서 식사지구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동지구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향상시킬 경의중앙선 향동역 역시 2020년 4월 역사 건설비·운영손실 보전금 전액을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조건부 승인을 통해 역사신설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수색역으로부터 1.7km 떨어진 곳에 건설하며, 총 사업비 147.75억 원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된 고양시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km)	추진현황	향후계획(안)	비고
서북권	고양선	새절역~고양시청	14.5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불로지구~탄현	15	사전타당성 용역 중	에타 등 거쳐 조치	김포축과 고양/파주축 연결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7.6	사업 재기획 용역 중	에타 등 거쳐 조치	고양/파주축 보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송~용산	18.5	예비타당성 조사 중	에타결과에 따라 조치	고양/파주축 보완
	대곡소사선	대곡역~소사역	18.4	공사 중	2021 준공	김포축과 고양/파주축 연결
서남권	원종홍대선	일산 연장 운행	6.9	건설 협약 완료		
		원종~홍대입구	16.3	사전타당성 용역 중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	인천/부천축 보완



고양시 장래 철도망

(설계 및 시설비), 연간 역사 운영비 8.16억 원, 사업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을 포함해 4년(설계 1년, 시공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역 신설과 더불어 고양시는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034번(고봉동~풍산역), 012번(관산동~원당역), 088번(내유동~삼송역) 등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였으며,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원당·원흥~서대문(M7145번),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노선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였다. 또한 고양시 동서간 연계를 위해 대화동~신원마을(999번), 대화동~지축역(888번) 노선을 신설하였고, 신규택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동지구(730번 등 5개 노선), 킨텍스지구(1100번 등 5개 노선), 신원마을·지축지구(999번 등 5개 노선), 덕이지구(56번 등 2개 노선) 등에 버스노선을 신설하였다. 내부교통을 담당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확충과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신설을 통해 이전에 비해 한층 촘촘해진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리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개통식

향후 개선방향

민선7기 고양시의 교통망은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통팔달의 간선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양시민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신설·확대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였다.

신 교통망 구축 성과를 토대로 한 민선7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고양시의 교통정책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고양시는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 의지 대외 표명의 일환으로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최가 확정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술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고양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하드웨어(기술) 측면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기버스 및 트램을 비롯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승용차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고양시민 누구나 손쉽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정책) 측면에서는 자전거와 보행 등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녹색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교통환경에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지속가능 도시 고양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잠시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였으며, 1991년 지방선거 부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으로 출범하였다.

지방자치 31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1년은 고양시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요구가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할 것이다.

고양시는 민선 7기의 비전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에 두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경제', '시민·사람중심', '시민행복', '지속가능'을 4대 정책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고양시 정책 10선〉의 발간 목적은 민선 7기 공약 중 추진이 완료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정책과 사업을 선정하여 고양시민들과 그 성과를 공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그 성과가 고양시에만 머물지 않고 타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김형성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hskim@gyri.re.kr)

시 승격 30주년인 2021년 고양시는 100만의 도시로 성장, 2022년에는 '특례시'로서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기존 일산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침대도시의 역할을 했던 고양은 이제 삶과 일터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고양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방향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행정주도에서 시민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하나는 행정주도에서 시민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람중심, 시민행복은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은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에서 신공공서비스론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이었던 데 반해,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주인으로 보고, 고객이 아닌 주인인 시민에 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제 행정은 주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정하고, 행정은 시민들이 만들거나 요구하는 서비스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고양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첫째, 시민참여제도의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과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향후,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민주도의 고양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주도 행정에 발맞추어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로 하여 고양시 산하 유관기관들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의 경우도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주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4~5년의 짧은 기간에 수행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시민주도의 방향 설정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도시 고양의 구축을 위하여 도시 숲, 장항 습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대책은 고양의 미래 세대들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양시 청년희망 정책은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현된 시민주도 행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속가능한 청년희망 정책을 위해서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참여 등에 대한 다방면의 사업의 추진과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시민주도의 행정은 시민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배양된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용적, 포용적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의 구현이 필요하다.

도시기반 강화

다른 하나는 도시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오는 도시,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람들이 오는 도시를 위해서 교통망의 양적·질적 확충과 더불어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버스 및

트램 등의 도입과 더불어 자율주행도시로의 시범전환도 필요하다. 특히, 고양의 일산동구, 서구는 계획도시로서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적정하며, 드론산업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스마트센서와도 큰 관련이 있다.

둘째,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를 위하여 고양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산밸리, CJ라이브 시티 등과 정책 10선에 제시된 MICE 산업을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드론산업유치, 스마트 화훼산업을 육성 등 더욱 다양한 산업이 생태계를 이루도록 복합적이고 종합

적인 경제·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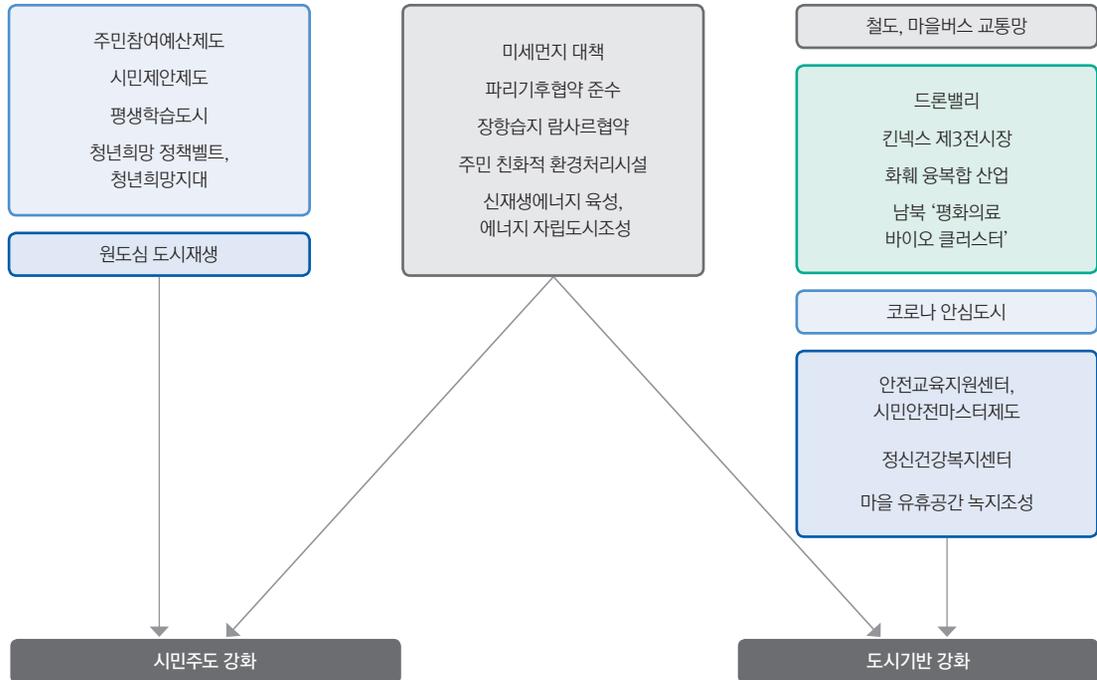
예를 들면 드론산업과 동시에 범위의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스마트 센서 등의 산업도 육성하는 등 산업의 유기적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양시에 비교 우위가 있는 남북평화의료 바이오 센터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시민안심도시, 시민돌봄 도시, 녹색환경 도시로의 정책 추진도 점진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의 단거위기 대응 능력과 장기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 10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성



사람중심 지속가능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우수정책 10선

편집위원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백주현(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형성(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안지호(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정철(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윤신희(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임지열(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정광진(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간사 노관령(고양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 주임)

인쇄 2021년 6월
발행 2021년 7월
발행인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빛마루 11층)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ttps://www.gyri.re.kr/>

편집 및 인쇄 넥스프레스(031-908-7958)

ISBN 979-11-91726-02-2